

# 중국산업경제브리프

2015년 6월호

- ◆ 이슈 분석: 중국 지방정부 경쟁적으로 한중 산업단지 설립
- ◆ 산업분석: 중국 스마트 자동차 개발 동향과 시사점
- ◆ 산업정책해설: 중국정부의 경기활성화정책-763계획
- ◆ 산업 동향 분석
  - 4월 중국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 여전히 5%대를 배회
  - 5월, 관방치와 민간치 모두 상승세로 전환
- ◆ 산업단신
  - 시진핑, 13차 5개년 계획 기간의 발전 방향 제시
  -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첫 액션플랜, ‘인터넷+유통’ 계획 발표
  - 중국, 초고속 광대역 네트워크 발전 가속화
  - 베이징시 서비스산업 개방 확대
- ◆ 특별기고: 중국의 식품안전 정책 동향과 시사점

## 산업연구원 북경지원(韓國産業研究院北京代表處)

연락처: 北京 Tel 010-8237-8633, Fax 010-8237-8663

인터넷전화(한국) 070-8837-3212; E-mail: [kietcn@naver.com](mailto:kietcn@naver.com)

산업연구원 중국산업 홈페이지([www.china.go.kr](http://www.china.go.kr))

\* 지난 호는 산업연구원 중국산업 홈페이지에서 구독 가능



## 중국 지방정부 경쟁적으로 한중 산업단지 설립

### □ 한중 FTA를 활용하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들 한중 산업단지 경쟁적으로 설립

- 한중 FTA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중국 다롄(大連), 칭다오(靑島), 옌타이(烟臺), 웨이하이(威海), 윈조우(溫州) 등 동부 연해지역 도시들이 잇달아 한중 산업단지 설립 계획을 발표하는 등 한국과의 산업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특히 한중 FTA 협정 시, 양국은 지역별 협력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지역간 협력 활성화를 도모
-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 항구도시인 산둥성 웨이하이와 칭다오가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한중 산업단지 설립을 가속화
  - 이미 중국 웨이하이와 한국 인천자유경제구는 지역경제협력시범구(地方经济合作示范区)를 설립해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 등 다방면에서 상호간 지역협력을 추진하기로 함.
  - 현재까지 웨이하이, 칭다오, 옌타이, 지난 등 산둥성 4개 도시와 옌청, 옌벤, 다롄, 충칭, 온조우 등이 다양한 형태의 한중 산업협력단지 건설방안을 내놓았음.

표 1 중국 주요 도시들의 한중산업단지 건설 계획

|      | 지역   | 산업단지 유형       | 협력 분야            |
|------|------|---------------|------------------|
| 동부연해 | 웨이하이 | 한중FTA 지방경제협력시 | 전자상거래, 관광, 의료, 물 |

|      |          |                                |                                       |
|------|----------|--------------------------------|---------------------------------------|
| 지역   |          | 범구(地方經濟合作開放試驗區)                | 류, 헬스케어                               |
|      | 칭다오      | 한중혁신산업단지(中韓創新產業園)              | 자동차, 정보전자, 정밀화학, 금융업, 영화산업, 첨단 헬스 의료  |
|      | 옌타이      | 옌타이 한중산업단지(煙臺中韓產業園)            | 첨단장비제조, 에너지·환경산업, 금융·보험, 문화, 의약품 헬스산업 |
|      | 지난       | 한중 첨단산업 협력시범구(中韓尖端產業合作濟南先行示範區) | 신소재, 서비스무역, 전자기술, 정보기술, 첨단장비제조업       |
|      | 옌청       | 한중 옌청산업단지(中韓鹽城產業園)             | 자동차, 서비스업, 스마트장비, 광전융합산업, 신에너지        |
|      | 온조우      | 한중 산업단지(韓國產業園)                 | 자동차 부품, 섬유 및 디자인, 소재, 전자, 광산업, 의약     |
| 동북지역 | 다롄(진푸신구) | 다롄 진푸신구 한중무역협력구(大連金普新區中韓貿易合作區) | 전자상거래, 인터넷, 관광, 문화, 국제무역, 금융          |
|      | 옌벤       | 한중옌벤산업단지(中韓延邊產業園)              | 헬스케어, 국제물류, 소프트웨어, 광섬유                |
| 서부지역 | 충칭(양장신구) | 양장신구 한중산업단지(兩江新區中韓產業園)         | 제조업, 문화산업, 자동차, IT 산업                 |

자료: 중국 언론 정리

## □ 지역별 한중 산업단지 설립 현황

### (1) 웨이하이(威海) 한중FTA 지역협력시범구

- 금년 2월 25일, 한중 FTA 가서명 협정문에서 산둥(山東) 웨이하이(威海)시와 인천을 한중 FTA 지역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언급
  - 웨이하이와 인천의 거리는 약 172km(93해리)로 지리적 근접성이 높고,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한중 해상항로를 구축하는 등 한중경제협력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현재 웨이하이는 한중 FTA와 관련해 지역경제협력개방시범구(地方經濟合作開放試驗區), 한중상품집산지(中韓商品集散地), 한중정보기술산업단지(中韓信息技術產業園)의 건설을 추진 중이며, 한중 전자상거래, 관광, 의료,

물류 등 다방면에서 시범정책을 시행할 계획임.

- 올해 2월, 웨이하이 해관의 ‘한중 해운 국제무역 전자상거래(中韓海雲跨境電子商務)’ 일반수출업무가 승인됨에 따라 한중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길이 열림.
- 웨이하이시는 지리적 이점과 인프라 기반을 활용하여 한국상품의 중국 물류분류센터를 설치하고 한국상품의 집산지로 활용할 계획임.
- 웨이하이시는 인천과 함께 의료, 미용, 헬스케어, 금융, 문화, 패션, IT, 서비스 아웃소싱 등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 (2) 칭다오, 한중 협력강화 행동계획 발표

- 칭다오는 「한중FTA 시대 대한국 개방 확대 및 협력 강화에 관한 행동계획(關於青島市搶抓中韓自貿區新機遇提昇對韓開放合作水平行動計劃)」을 발표
  - 칭다오 서해안신구(西海岸新區) 국제경제협력구에 ‘한중혁신산업단지(中韓創新產業園)’를 조성하고, 한국 원화 결제센터 설립, 글로벌 자금조달 혁신시범시행 등을 포함한 추진 계획을 제시함.
  - 행동계획에 따르면, 칭다오는 한국과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협력산업단지를 건설하며, 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할 계획임.
  - 또한 금융, 해양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한국과의 전자상거래를 늘릴 방침임.
  - 향후 한중혁신산업단지(中韓創新產業園)를 한중경제공동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상정해 한중 정부가 지원하는 주요 산업 협력단지로 육성하고, ‘한중 해상고속도로’ 건설 및 중간무역 확대, 駐부산 칭다오 상공센터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
- 칭다오는 2020년까지 對한국 무역액을 2015년의 2배로 늘리고, 한국의 칭

다오 투자를 누적 200억 달러로 끌어올리고자 함.

- 칭다오는 한국과 주로 자동차, 정보전자, 정밀화학, 금융업, 영화산업, 헬스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 행동계획에 따르면, 칭다오시의 10대 천억 위안대 산업체인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자동차, 정보전자, 정밀화학공업 등 산업에서 협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한국의 은행, 보험, 웰스컨설팅, 재테크, 금융컨설팅, 사모펀드 등 금융기관의 칭다오 진출을 장려하여 칭다오 금융업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고자 함.
  -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의료·헬스케어, 관광, 창작영화,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직업교육, 도시계획, 상품유통, 제3자 테스트기관, 자동차 A/S서비스와 회계, 법률 등 중개서비스를 포함한 10대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첨단 헬스의료기술을 유치해 서해안 한중 협력 헬스의료기지를 조성할 계획
- 칭다오는 한국과 가까운 항구도시로서의 입지우위를 이용하여 한국의 첨단기술설비와 핵심 부품 수입을 장려하고, 한국 화장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의류 등 중고급 소비재의 수입도 확대할 계획임.
  - 한-칭다오 여객·화물 정기 운행 선박을 이용해 완성차 수입을 전개하고, 자동차 포트 설치, 글로벌 자동차 전시회교역센터 조성 등 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을 도모
  - 현재 칭다오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10만 명에 달하고, 대구, 부산 등 한국 7개 도시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어, 칭다오는 경제, 무역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의 교두보로서도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
- 작년 8월, 칭다오는 한중혁신산업단지의 일환으로 황다오신구(黃島新區)에 한중무역협력구(中韓貿易合作區) 건설에 착수, 한중무역협력구는 주로 서비스무역 관련 산업에서의 한중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 (3) 엔타이 한중산업단지(煙臺中韓產業園)

- 5월, 산둥(山東)성 옌타이시는 「옌타이 한중산업단지 건설추진방안(關於推進煙臺中韓產業園建設的工作方案)」에서 한중 FTA의 산업협력시범구 건설방안을 발표
  - 옌타이 한중산업단지 건설은 2014년 7월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한중 FTA가 정식 서명된 6월 1일, 서울에서 한중산업단지 체결식을 개최
  - 산업단지의 총 계획면적은 349km<sup>2</sup>이며, 신흥산업공생구(新興產業共生區), 임항경제구(臨港經濟區), 현대서비스업클러스터(現代服務業聚集區)로 구성
  - 한중산업단지에 한중 FTA의 산업협력시범구(中韓自貿區產業合作示范區), 동북아의 종합 국제물류허브(東北亞綜合國際物流樞紐樞紐), 일대일로 전략의 협력 플랫폼(一帶一路戰略合作平臺), 한국형 스마트주거지구(智慧型宜居新區)를 조성할 계획
- 옌타이는 중국 국가전략인 일대일로와 동아시아 경제통합 건설에서 중요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한중 열차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옌타이를 통해 중국 일대일로 전략에 편승할 수도 있음.
  - 또한 옌타이시는 양국의 원활한 인적, 물적 교류와 자금이동, 정보공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옌타이시는 바이오기술,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해양첨단기술 등 신흥산업과 물류, 컨벤션, 금융·보험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옌타이 투자 유망분야로 한국기업이 경쟁우위에 있는 자동차, 선박, 기계, 전자, 석유화학, 의약품, 식품·건강보조식품 등과 옌타이시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하는 첨단장비제조,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애니메이션 분야 등을 들 수 있음.

**표 2** 중국 엔타이시의 한국과의 협력 희망 산업

| 분야                 | 주요 협력 업종 및 추진 계획   |
|--------------------|--|
| 첨단장비제조산업           | CNC, 산업용 로봇과 의료용 로봇 연구개발 및 생산, 응용 등 스마트 제조장비                     |
| 신에너지·에너지 절약 및 환경산업 | 친환경 조명, 천연가스 수송관, 에너지정보화에 대한 기술적 교류와 사업 제휴                       |
| 전자정보산업             | 스마트도시, 스마트환경, 스마트교통, 스마트안보, 스마트의료                                |
| 해양산업               | 해양장비제조, 해양생물, 해양에너지광산, 해양어업, 해양문화 관광, 해양운송물류, 임항가공제조, 해양생태환경보호 등 |
| 물류                 | 육해공, 철도의 통합물류망 구축  |
| 상품유통               | 한중 상품수출입집산지 및 중간 경유지 조성  |
| 금융                 | 한국 금융기관의 지사 설립 유치, 엔타이기업의 한국내 상장 지원                              |
| 전자상거래              | 한국 전자상거래 관련 대기업, 물류기업과 협력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한중 상호연동 시스템 마련             |
| 문화산업               | 한중 혁신형 인재 양성센터, 한중 애니메이션·영상콘텐츠 교류센터, 한국 문화상품 전시·거래센터 설립          |
| 의료                 | 한중 헬스산업단지 건설, 한중 의료기관의 학술 교류 및 합자합작 장려                           |
| 실버산업               | 노인요양 및 휴양시설, 실버타운 건설, 노인교육·훈련, 건강보험 등 관련 산업의 협력                  |

자료: 중국 언론 정리

#### (4) 지난 한중 첨단산업협력단지

○ 2014년부터 한중일 산업 협력에 주력해 온 지난은 이번 한중 FTA 협정문 서명을 계기로 한중 첨단산업 협력시범구(中韓尖端産業合作濟南先行示範區) 건설에 박차를 가함.

- 작년 6월, 지난시는 「한중일 산업협력 지난선행시범구 계획건설에 관한 실시방안(關於籌劃建設中日韓産業合作濟南先行示範區實施方案)」(이하, 방안)을 발표하고, ‘한중일 주택산업화협력시범구(中日韓住宅産業化合作濟南先行示範區)’, ‘한중 첨단산업협력시범구(中韓尖端産業合作濟南先行示範區)’, ‘한중일 보세전시거래시범구(中日韓保稅展示交易濟南先行示範區)’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힘.



- 그 중 한중 첨단산업 협력시범구는 지난 신소재산업단지(濟南新材料產業園區)에 ‘한중 첨단산업 융합원(中韓尖端產業融合園)’을 설립하여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첨단기술기업을 유치할 계획임.
- 한국 대기업과 전자기술, 정보기술, 첨단장비제조업 분야의 강소기업을 150~200개사 유치하는 것이 목표
- 지난시는 한중일 경제협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한중일 벌크상품수입물류센터(中日韓大宗商品進口集散中心), 국제무역결제센터(國際貿易結算中心), 벌크상품 수입정보센터(大宗商品進口信息中心), 주요 수입상품 가격형성센터(重點進口商品價格形成中心)’로 육성할 계획

#### (5) 한중 염청산업단지(中韓鹽城產業園)

- 중국 상무부는 염청을 3대 한중산업단지 중점 협력 도시 중 하나로 강조하며, 한중 염청산업단지 건설에 힘을 싣고 있음.
  - 염청은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아시아태평양 FTA 추진의 교차지점에 있는 지역으로, 장강삼각주 일대에서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임.
  - 현재 염청시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653개사에 달하며, 약 2만여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음.
  - 2011년 염청경제개발구(鹽城經濟開發區)에 한국기업공업원(韓資工業園)이 설립되었으며, 기아자동차, 모비스, 한일, 세종 등 총 54개 기업이 입주해 있음.
- 2014년 7월에는 장쑤성 한국산업 이전 및 집적 시범구로 지정되었으며, 자동차, 서비스업, 스마트장비제조, 광전융합산업, 신에너지 및 관련 장비산업, 임항물류산업, 중대형 장비제조업, 친환경 농업, 신소재, 항구물류 등 10대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선정함.
  - 염청시는 2020년까지 승용차 백만대, 신에너지자동차 15만대 규모의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신에너지와 관련 장비제조기지, 친환경산업발전기지



를 조성할 계획

## (6) 다롄 진푸신구 한중무역협력구

- 금년 5월, 다롄(大連)시는 진푸신구에 3km<sup>2</sup> 면적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종합실험구·한중무역협력구(跨境電商綜合實驗區暨中韓貿易合作區)’를 조성하고, 한국과의 온·오프라인 융합을 기반으로 한 국제 물류와 무역협력 강화에 나섬.
  - 한중무역협력구는 보세국제협력구(保稅跨境合作區)와 관광무역시험구(旅遊貿易試驗區)로 구성되며, 수입상품의 보세 전시, 전시판매, 전자상거래가 주된 협력 분야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전자상거래, 인터넷, 관광, 문화, 국제무역, 투융자 등 산업의 시범사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
  - 관광무역시험구는 한국의 라이프스타일과 관광업에 초점을 두고, 멀티미디어 관광공연,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배송과 금융서비스, 한국형 라이프스타일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진푸신구는 다롄시 면적의 18%와 인구의 22.8%를 차지하며, 경제규모는 다롄시 지역GDP의 37.5%에 달하는 다롄의 주요 신흥산업 집적지임.
  - 진푸신구는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보세구, 수출가공구, 관광휴양지구 등 주요 개방형 기능구가 소재해 있는 동북지역의 주요 대외개방 플랫폼으로, 현재까지 글로벌 500대 기업중 66 개사가 진푸신구에 진출함.
  - 첨단장비제조업 클러스터, 완성차 및 자동차 핵심부품산업 클러스터, 전자정보산업 클러스터, 항공항만 물류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음.
- 다롄 진푸신구는 라오닝 연해경제벨트(遼寧沿海經濟帶), 환발해경제권(環渤海經濟圈)이 맞닿아 있는 곳으로 하얼빈-다롄운송대동로(哈大大通道)와 철도망 등 전 동북지역으로 뻗어나가는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동북아 국제 항로의 요충지로서 역할하고 있음.

## (7) 옌벤(延邊) 한중산업단지

- 옌벤자치주는 2014년 말부터 지린(吉林)성 정부에 한중산업단지(中韓產業園)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한중 옌벤산업단지 종합계획을 작성해 상무부(商務部)에 제출하는 등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옌벤자치주는 올해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에서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해 한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훈춘(琿春)의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물류산업단지와 옌지(延吉) 한정인삼(韓正人參)을 중심으로 한 헬스과학기술산업단지(健康科技產業園)를 조성할 것” 이라고 강조함.
- 작년 6월 기준, 지린성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약 700개사에 달하며, 최근 포스코와 현대그룹이 12억 위안을 투자해 훈춘 현대국제물류사업을 추진 중임.
  - 현재 투먼(圖們)시는 휴롬전자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해 소프트웨어, 광섬유 등 전자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있음.

#### (8) 충칭 양장신구 한중산업단지(兩江新區中韓產業園)

- 충칭시는 한중 FTA 협정문의 서명을 계기로 기존에 추진해오던 양장신구 한중산업단지(中韓產業園) 건설을 서두르고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2011년 9월, 한중 정부는 「한중산업단지 건설 공동 지원 MOU(共同支持建設中韓產業園的諒解備忘錄)」에서 충칭 양장신구에 1,200km<sup>2</sup>의 한중산업단지 공동 건설을 추진키로 합의함.
  - 한중산업단지의 핵심지구는 룡싱공업단지(龍興工業園區)로 총 면적은 809헥타르이며, 현재 제조업과 문화산업이 주로 들어서 있으며, 그 밖에 국제자동차도시(國際汽車城), 국제클라우드컴퓨팅센터(兩江國際雲計算中心)가 한중산업단지에 포함됨.
- 작년 말 기준, 충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총 132개이며, 실제이용외자는 7억 7천 8백만 달러, 주요 투자분야는 제조업, 부동산, 서비스업임.

- 특히 양장신구의 한중 교류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작년 충칭과 한국의 무역액은 2013년 대비 2.9배 증가한 460억 5천만 위안을 기록했으며, 그 중 양장신구의 대한국 무역액은 356억 2천만 위안으로 전년도 대비 6.2배 증가함.
- 현재 양장신구에 약 60여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충칭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중 70%가 양장신구에 집중 분포해 있음.

#### □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한중 산업단지를 적극 활용

- 상술의 지역외에도 삼성반도체가 진출한 시안(西安), 중국의 유태인이라고 불리는 원조우상인의 근거지인 원조우시 등이 한국 전용 산업단지 또는 한국성(코리아타운)을 설립하여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기업들을 적극 유치하려고 함.
- 중국 지방정부들은 한중 FTA를 지역 경제발전은 물론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첨단화의 계기로 삼고자 경쟁적으로 한중 산업단지를 설립하는 중
- 한국 기업들은 각 지역의 장단점과 우대정책 등을 잘 비교해 중국 내수 시장 진출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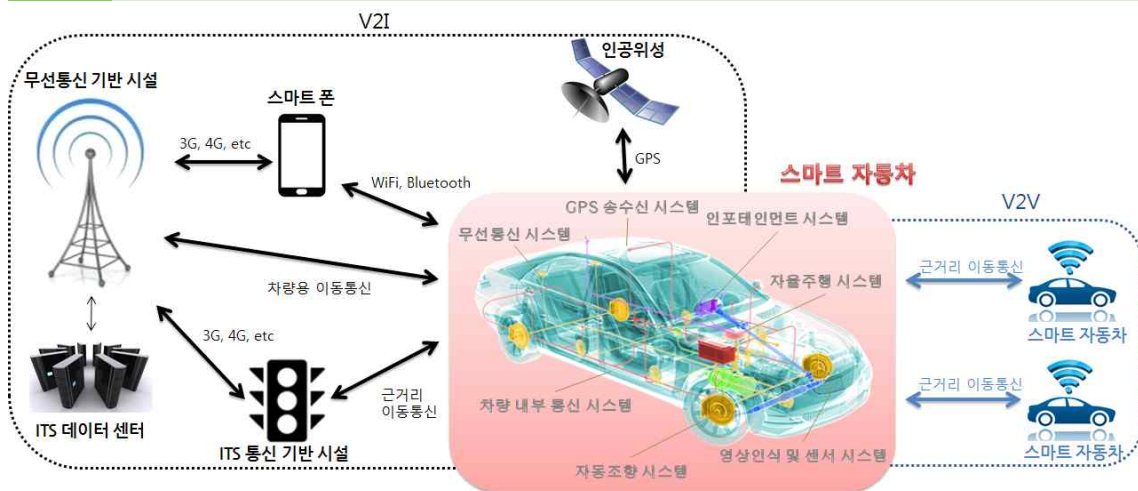
# 중국 스마트 자동차 개발 동향과 시사점

신성장산업연구실 연구원 김승민

## □ 스마트 자동차: 자동차에 IT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과 편의를 제공

- 스마트 자동차는 최신 전자·제어, 정보통신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하여 운전자에게 고도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자동차
  - 스마트 자동차의 개념은 자동차가 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운전자와 차량에 제공하는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개념과 자동차 구동계를 제어하여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Car) 개념으로 구분
  - 스마트 자동차는 차량 자체의 내부 통신 및 전자제어 시스템과 차량 외부 통신 시스템, 통신기반 시설 인프라가 주요 구성요소

그림 1 스마트 자동차 및 주요 구성요소



자료 : 산업연구원(2014)

- 스마트 자동차를 구현하는 기술은 목적에 따라 차량 안전을 위한 운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포함하는 차량 안전기술과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 편의 기술로 분류

**표 1** 스마트 자동차 구성요소별 주요 세부 기술

| 분류                 | 주요 세부 기술   |
|--------------------|--|
| 차량 내 통신 및 전자제어 시스템 | 차량 내부 통신 시스템(CAN, Controller Area Network), 운전보조시스템(ADAS, Advanced Drive Assistance System), 지능형 순항 제어 시스템(ACC, Advanced Cruise Control),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영상인식 및 센서 시스템 등 |
| 차량 외부 통신 시스템       | 단거리무선통신시스템(DSRC, 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s), 차량간 네트워크 기술(VANET, Vehicular Ad-hoc Network), 차량용 무선 통신 기술(WAVE,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 등   |
| 운전자 서비스 제공 시스템     | 차량용 네비게이션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Infotainment System), 텔레매틱스 서비스 시스템(Telematics Service System) 등   |

자료 : 산업연구원 정리

## □ 자동차 내 편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안전 규제 강화로 시장 확대

- 자동차 내에서 편의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 정보를 활용하여 교통 체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자동차에 전자·통신 기능을 이용한 편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가
    - ※ 2013년 독일의 자동차 소비자 설문조사<sup>1)</sup>에 따르면 자동차 구입자의 49%가 자동차의 성능보다 스마트폰 연결 기능을 더 중요하게 고려
  - 미래에 자동차수 증가로 인해 교통체증과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통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적 손실 감소를 도모
    - ※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한 신호등을 도입하면 자동차 정지 횟수를 40%, 차량 운행 시간을 25%, 연료 소모량을 10% 줄일 수 있을 것<sup>2)</sup>
-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차량 안전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

1) Consumer Behavior, Germany 08/2013

2) Roland Berger, 2012, "Connected Vehicles: Capturing the value of data"

- 자동차 교통사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바, 스마트자동차 도입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임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 2020년 전체 차량 장착 시 연간 교통사고 절감효과 최대 3.72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 0.75명, 보행자 사망자 감소 효과 0.66명 예상<sup>3)</sup>
- 각 국은 자동차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TPMS, ESC, LDWS, AEBS 등을 자동차에 장착하여 안전 효과가 뚜렷이 나타난 시스템들에 대해 의무장착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 유럽의 승용차 대상 신차 안전프로그램 종합등급 평가(Euro NCAP)의 안전성 강화 로드맵( '13년 ~ ' 15년)에 맞춰 ADAS 제품 최소 장착률을 기존 3~10%에서 2015년 50~100% 수준으로 강화

| 표 2 국가별 스마트 자동차 안전기술 적용 규제 |   |
|----------------------------|---|
| 국가                         | 내용  |
| 유럽                         | 2014년부터 AEB(Autonomous Emergency Braking), LDW(Lane Departure Warning), 2015년부터 차량긴급전화서비스(eCall) 가산점 부여 |
| 미국                         | 2012년부터 BUA(Back-up Aid) 의무 장착, LDW, FCW에 대한 가산점 부여   |
| 일본                         | 2014년부터 AEB, LDW 가산점 부여, 3.5톤이상 LDW 의무 장착   |
| 중국                         | 2016년부터 AEB, LDW, BSD(Blind Spot Detection) 가산점 부여  |
| 한국                         | 2009년 디지털 운행기록계 의무 장착, 2013년부터 LDW, 2014년부터 eCall 가산점 부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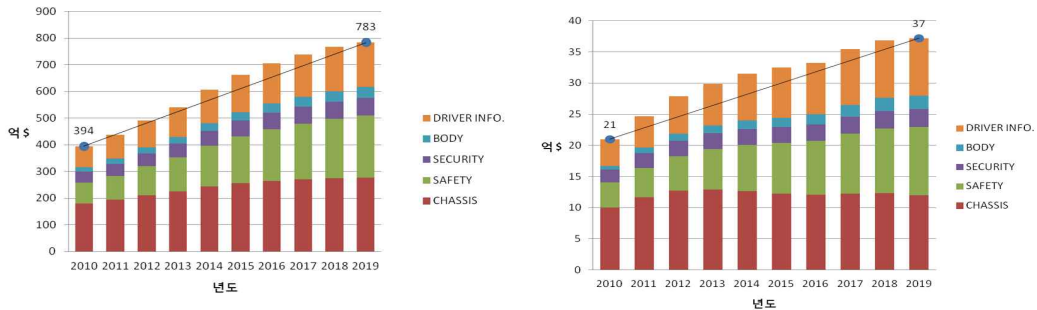
자료 : 각 국가별 자료, 산업연구원 정리

- 소비자 수요 증가와 정부 규제 강화에 따라 스마트 자동차 시장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향후 차량용 통신망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2019년에는 전체 차량의 절반 정도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전망
  - 세계 스마트 자동차 시장은 2010년 394억 달러에서 2019년 78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스마트 자동차 시장은 21억 달러에서 37억 달러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3, “스마트카 산업부 R&D 지원 정책”

## 그림 2 스마트 자동차 시장 현황 및 전망

<세계 스마트 자동차 시장 현황 및 전망> <국내 스마트 자동차 시장 현황 및 전망>



자료 : Strategy Analytics(2012)

주 : 운전정보, 자동차차체, 보안, 안전, 샤시

○ 기계 중심의 자동차 산업에 최신 전자·통신 기술이 접목되면서 산업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

- 자동차 부품의 전자장치의 비중이 증가<sup>4)</sup>하면서 자동차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전자·통신 산업 등 이종 산업으로 부품시장 주도권 경쟁이 확장되고 있음.

- 스마트 자동차가 보급됨에 따라 차량용 무선통신 서비스 산업, 차량내 모바일 서비스 산업, 텔레메틱스 산업 등 스마트 자동차 주변 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

- 자동차의 전자장치와 연동되어 교통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자동차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가 새로 생겨나며 차량 수리업, 자동차 보험업 등에 파급효과가 클 것

### □ 산업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전자·IT 업체들의 자동차산업 진출이 활발

○ 자동차 기업과 IT 기업은 융합기술 연구를 위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한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

4) 차량 한 대에 ECU 70여개, 소프트웨어 코드 1억 라인 이상, 차량 내 전자/전기장치 연결 와이어는 4km 이상 활용되고 있으며 전자장치의 자동차 원가 비중은 2020년 50%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



|        |   |
|--------|---|
|        | · 동 기술은 완전 자율주행차로 이행하기 위한 전단계로 평가   |
| Toyota | · 2013년 1월 자율주행용 시험 모델 AASRV(advanced active safety research vehicle) 공개<br>· 10월에는 안전거리 유지 및 차선유지 기능이 결합된 AHDA(automated highway driving assist)가 탑재된 자율주행차 5년내 출시를 발표 |
| Nissan | · 2013년 8월 MIT, Stanford, Oxford, 동경대 등 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한 Leaf 자율주행차 공개<br>·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점을 2020년으로 보고 향후 10년 내 판매 계획을 발표   |
| 현대·기아  | · 2012년 초 ASCC(Advanced Smart Cruise Control)를 기반으로 고속도로 자율주행시스템 개발, 약 2년간 5만km 시험 주행을 실시, 5년 내 상용화 기대  |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4), 자율주행차 최근동향 및 도입 이슈 참고, 산업연구원 정리

### □ 스마트 자동차 기술 개발을 위해 각 정부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지원

○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자동차 기술 개발 및 차량용 통신망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술 개발·시험 사업을 진행 중

- 국가별로 스마트 자동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 기술개발을 지원하거나 산·학·연 연계 사업 지원
- 각 국 정부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을 위한 차량용 통신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사업을 진행 중

| 표 5 스마트 자동차 관련 정부 육성 정책 |   |  |
|-------------------------|---|--|
| 국가                      | 스마트 자동차 연구개발 지원 정책  | 차량용 통신망 인프라 구축 정책  |
| 미국                      | 정부의 미래형 자동차 연구개발 전략 수립 및 주요 자동차 업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 기술개발 지원                    | Connected Drive 프로젝트를 통해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변 인프라의 통신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br>WAVE(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 통신 기반 Test bed 구축 및 서비스 검증 |
| 유럽                      | EU 경제성장 비전인 EU2020에서 스마트·지속가능성장의 일환으로 스마트카를 포함한 스마트 시스템 기술개발 정책인 EPoSS 추진 | CVIS(Cooperative Vehicle-Infrastructure Systems), SAFESPOT, C2X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SimTD 프로젝트를 통해 서비스 검증  |
| 일본                      | '00년 초부터 산·관·학 연계한 스마트카 구현 로드맵 수립 및 연구개발                                  | Smart Way21 프로젝트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운행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3단계   |

|    |   |   |
|----|---|---|
|    |   | (2000~2015) 사업을 진행  |
| 한국 | 미래부는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안)의 '스마트카'를 30대 국가중점과학기술에 선정, 산업부는 '자율주행자동차'를 13대 산업엔진의 한 분야로 선정 |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건설교통 R&D 혁신 로드맵'에서 '스마트 하이웨이' 사업을 진행. 미국의 WAVE 통신 프로토콜 기반으로 고속도로의 Test bed 구축. 2014년부터 C-ITS 시범사업 추진 중 |

자료 : 산업연구원 정리

## □ 중국내 자동차 주요 소비층 변화로 스마트 자동차 시장 규모 증가 예상

○ 중국 자동차 시장은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주요 자동차 소비자층이 가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 중국 승용차 판매 증가율은 한자리 수로 감소하였으나 변동 폭이 줄어들어 안정화되고 있음.

※ 자동차 생산량 2,372.3만대(7.3% 증가), 판매량 2,349.2만대(6.9% 증가)

- 경차의 판매대수가 감소한 반면 소형차, 준중형차가 주력으로 부상하여 주요 소비층이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가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

※ 2014년 소형차의 판매비중이 63.8%, 준중형이 25.5%를 기록하여 전체의 89.3% 차지

○ 중국 내 자동차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최근 닐슨의 통계 자료에서 중국의 소비자는 미국시장이나 독일시장의 소비자 보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매할 의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제어를 포함한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될 경우, 중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6만 명이며 2012년 미국의 3.4만 명이나 2013년 유럽연합의 1.2만 명과 비교할 때 아주 높은 수치

○ 중국의 스마트 자동차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여 미래에 세계 전체 시장에

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2015년 중국 자동차 생산량은 약 2,500만대에 달할 것을 예상되며 스마트 카 시스템은 일부 고급자동차에 적용되고 있으나 점차 일반 모델로 보급 될 것으로 예상
- 2015년 중국 스마트 자동차 시장 규모는 1,500억 위안(약 26조 4,000억원)을 넘어서고 스마트 자동차 보유 인구가 전체 자동차 보유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또 5년 후인 2020년에는 그 규모가 2000억 위안(약 35조 2,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sup>5)</sup>
- 시장조사기관 룩스리서치는 보고서를 통해 2030년에 전 세계 스마트 자동차 시장 중 중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를 차지해 세계 최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

#### □ 중국의 IT와 자동차 업체들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스마트 자동차를 적극 개발

- 중국의 세계적인 IT업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스마트 자동차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
  - 중국의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각종 대형 인터넷 관련 업체들은 자동차 업체들과 협력을 통해 스마트 자동차 산업에 진출
  - 이들 IT 업체들은 스마트 자동차 분야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체적인 스마트 자동차 운영체제(OS) 개발하고 차량용 정보 서비스를 제공
- 중국 로컬 자동차업체들은 외국 자동차 업체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스마트 자동차에 집중 투자
  - 중국내 외국 자동차업체는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로컬 자동차업체는 스마트 자동차를 통해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

5) 국가통계국(2014)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통계보고서'

- 최근 열린 상해모터쇼에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자동차에 통신 기술을 접목시킨 커넥티드카를 다수 공개하면서 전략적 방향을 확정

**표 6** 중국 스마트 자동차 기업 기술 개발 현황

| 중국 기업          | 스마트 자동차 관련 기술 개발 협력 현황  |
|----------------|---|
| 바이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해 9월 BMW와 협력하여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무인자동차 주행기술을 실험하기로 했다고 발표</li> <li>· 바이두는 BMW 차량에 바이두지도, 음성식별 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제공, 지난 2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인 ‘카 라이프(Car life)’ 를 발표</li> </ul>  |
| 알리바바, 상하이 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이 자동차 그룹과 알리바바는 ‘커넥티드카’ MOU를 체결하고 10억 위안의 스마트 자동차 펀드를 조성</li> <li>· 상해자동차는 자동차 개발 기술을 제공하고 알리바바는 자동차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클라우드 컴퓨팅, 지도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개발</li> </ul>   |
| 텐센트 폭스콘, 하모니오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텐센트는 폭스콘, 하모니오토와 손잡고 ‘인터넷+스마트카’ 협력을 전개</li> <li>· 텐센트는 인터넷 오픈플랫폼을 제공하고 스마트카 운영체제를 개발, 폭스콘은 첨단 모바일 단말기와 스마트 자동차를 디자인, 생산, 제조할 예정, 하모니오토는 첨단 자동차 판매 및 서비스를 담당.</li> <li>· 텐센트는 지난해 5월 차량운행 데이터 분석 및 위치 정보 등 스마트 자동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인 루바오박스를 출시</li> </ul> |
| 치루이 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망 공급업체 버타이와 인터넷 자동차 서비스 회사 이도우움처사와 연합하여 자동차 공유 합작회사를 설립, 2016년에 스마트 전기 자동차를 출시할 계획</li> </ul>  |
| 화웨이, 장안 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웨이는 장안 자동차와 MOU를 체결하여 스마트 자동차 영역에서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자동차 통신설비, 모바일 동영상, 이동단말기, 칩, 시스템 사용 및 서비스 등 영역에서 업무 협력을 진행</li> </ul>  |
| 화웨이, 동평 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웨이는 동평 자동차와도 MOU를 체결하고 지능형 자동차, IT/ITC 정보 서비스 등 영역에서 협력을 진행</li> <li>· 동평 자동차와 차량 내 정보 서비스인 WindLink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출시 예정인 동평 평선AX7 모델에 장착</li> </ul>  |
| 베이징 자동차, LeT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징자동차그룹은 ‘2015 상하이 모터쇼’ 에서 제작발표회를 열고 중국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LeTV와 함께 스마트카 시장에 진출 계획을 밝힘.</li> <li>· 모터쇼에서 공개한 컨셉트카는 베이징 자동차가 차체제작을 맡았고 LeTV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클라우드 시스템간 호환을 가능하게 하는 헤드유닛 시스템을 제공</li> </ul>  |

자료 : 각 기업 홈페이지, 산업연구원 정리

## □ 중국 정부는 스마트 자동차 분야 육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 정책을 마련

- 중국 정부의 스마트 자동차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중국 스마트 자동차 시장이 성장하는데 일조

- 제조업을 대표하는 전통 자동차 산업과 인터넷이 융합된 스마트카 산업은 중국 당국이 올해 새롭게 내건 '중국제조(中國製造)2025'과 '인터넷 플러스(+)' 구상의 핵심 주축산업으로 주목
  - ※ '중국판 인더스트리 4.0'으로도 불리는 '중국제조2025'는 전통 제조업과 사물인터넷(IoT)을 결합해 스마트한 생산을 추구하는 것
  - ※ '인터넷 플러스(+)'는 기존산업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의 새로운 테마로 부상

○ 중국은 대학을 중심으로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꾸준히 지원

- 80년대부터 대학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있음.
  - ※ 국방과학기술대학은 2011년 7월, 고속도로 286km 구간을 평균 87km/h, 3시간 22분에 완주하고 군사교통학원은 2012년 11월, 고속도로 104km 구간을 평균 100km/h으로 완주

□ 국내 스마트 자동차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법·제도 마련 필요

○ 정부의 ITS 인프라 구축과 기업의 스마트 자동차 기술 개발을 연계하여 통합된 정책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

- 한국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ITS 인프라 구축은 국토교통부, 서비스와 콘텐츠산업 육성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 일원화된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
  - ※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R&BD 전략 중 차량용 IT 및 SW 부품 기술<sup>6)</sup>과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R&D 중장기 전략 중 자동차 지능형 ICT 카와 ICT 카 서비스 개발 전략<sup>7)</sup>,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계획 2020<sup>8)</sup> 등

○ 스마트 자동차 등장에 따라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도로교통과 관련된 새로운 법·규제에 대한 연구도 필요

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R&BD 전략(2014~2018)", 2013  
 7) 미래창조과학부, "ICT R&D 중장기 전략(2013~2017)", 2013  
 8) 국토해양부,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계획 2020", 2012

- 자동차 운전 중 정보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자동제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
  - ※ 미국은 Connected Vehicle Research Program의 V2V safety application research plan을 통해 스마트 자동차 운전 시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
- 자율주행 기술 시험 운행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스마트 자동차의 도로 교통법상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미국은 2013년 운수부가 자율운행 차량 시험운행 요건 지침을 마련했으며 캘리포니아, 네바다, 플로리다 등 일부 주는 시험운행을 허가
  - ※ 일본은 닛산의 자율주행 시험운행 차량에 정식 번호판을 발급

#### □ 중국내 스마트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해 각 분야별로 전략적 접근 필요

- 국내 자동차 기업의 중국 내 스마트 자동차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 IT·통신 서비스 기업과 협력이 필요
  - 중국 내 로컬 기업에 비해 우수한 자동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IT 서비스 기업과 적극적인 기술개발 협약을 추진하여 시장을 선점
  - 여타 해외 자동차 기업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 자동차를 도입하여 대중화 선도 전략을 추진함이 바람직
- IT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내 스마트 자동차 서비스 시장 진출을 도모
  - 국내 모바일 서비스 기업 역량과 우수한 모바일 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스마트 자동차 서비스 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함이 바람직
  - 중국에 비해 앞서 있는 모바일 서비스 경쟁력을 활용하여 중국 내 스마트 자동차 서비스 및 콘텐츠 시장에 진출
- 스마트 자동차 분야 기술 표준 수립을 위한 한·중 협력이 필요하며 관련 법·규제에 대한 정부간의 협조도 필요

- 최근 새로운 산업 분야인 스마트 자동차 분야의 기술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 계층별, 국가별로 경쟁이 심화
  - ※ 차량용 표준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해 제니비(GENIVI), 안드로이드, i-OS, QNX 등의 운영체제(OS)가 경쟁
  - ※ 표준 차량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유럽 자동차 기업을 중심으로 AUTOSAR(AUTomotive Open System Architecture)라는 산업 표준 단체를 결성하여 표준 기술 개발 중
  - ※ 자율주행자동차 표준 기술은 개발 업체에 따라 레이더, 카메라, 센서 등을 활용하는 플랫폼이 서로 다르나 향후 표준화 될 것으로 예상
  
- 도로상에 기술 표준화가 필수적인 자동차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표준화가 달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미래 자동차 표준 기술 수립을 위한 한·중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중국 스마트 자동차 시장 진출을 위한 길을 마련
  
- 표준기술 뿐 아니라 주파수할당, 기기인증규격, 수익분배구조 등의 법·규제 마련을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





## 중국정부의 경기활성화정책-763계획

- 최근 중국경제 성장률이 7% 대 초반으로 급락하면서 중국정부는 투자, 소비, 지역균형 등 전반에 걸쳐 경기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
  - 신창타이(新常态, 뉴노멀) 시대에 적응하는 차원에서 중국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763계획을 발표
  - 763 계획이라함은 ‘7대 중대 투자 공정(7大工程包)’, ‘6대 소비 공정(6大领域消费工程)’, 및 ‘3대 전략(3大战略)’의 763을 의미

### □ 7대 중대 투자 공정(7大工程包)

- 2014년 말, 국무원은 ‘7대 중대 투자 공정’ 안을 비준, 동 안은 정보 및 전력망 등 중대 연결망 사업, 건강양로서비스 산업, 생태환경보호 산업, 친환경에너지 산업, 식량 및 수리 시설 산업, 교통 산업, 석유가스 및 광산자원 개발 산업 등의 7가지 산업 영역에 대한 구체적 투자 목표 및 계획을 제시한 것임.
  - 정보 및 전력망 등 중대 연결망 산업 영역에서는 차세대 정보 기초설비 건설, 전력망 건설 등을 투자 중점 영역으로 지정, 2015년까지 12개의 서전동송(西电东送)<sup>9)</sup>의 송전로를 우선 건설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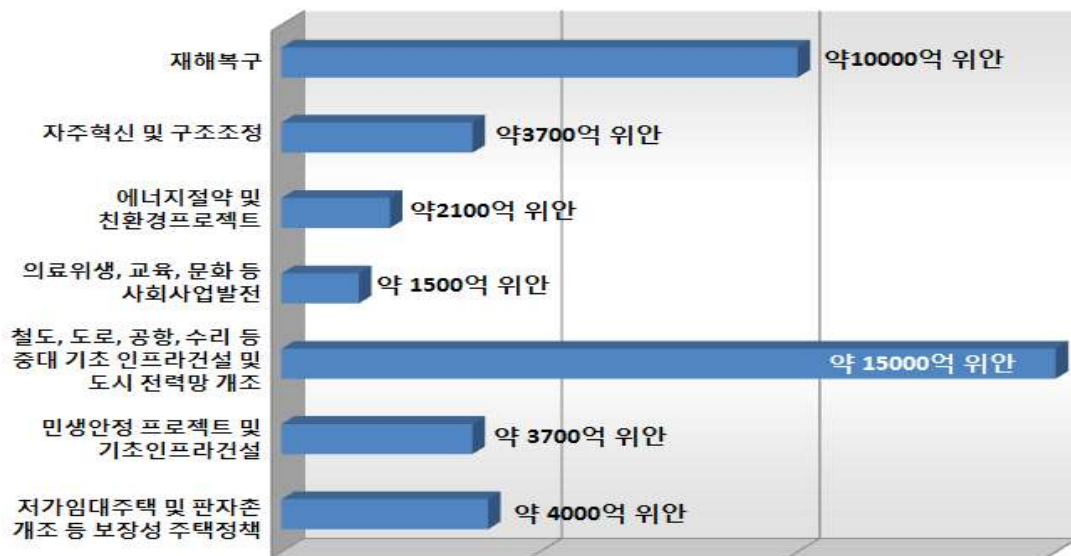
9) 서전동송은 서쪽의 전력을 동부지역으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

- 건강양로서비스 산업 영역에서는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민간자본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비영리성 의료기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 운영-국가 보조, 혹은 국가 건설-민간 운영 등의 방식을 실현하여 양로시설 설립에 관련한 사회 역량을 강화시킬 계획
  - 생태환경보호 산업 영역에서는 산업의 대기오염 방지 및 청정에너지 생산 기술 개혁에 대한 프로젝트, 석탄보일러의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기능 개혁에 대한 프로젝트, 여열 및 과잉간극수압 이용에 대한 프로젝트, 농작물 폐기물 이용에 대한 프로젝트를 중점 투자영역으로 지정
  - 친환경에너지 산업 영역에서는 2016년까지 서남부 지역에 26개의 수력 및 풍력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며,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소와 분포식 태양광발전소 시범지역 운영을 적극 추진할 예정
  - 식량 산업 영역에서는 2016년까지 1,000억 근(500억Kg)의 식량 저장 시설 건설을 목표로 하며, 수리 설비 산업 영역에서는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3·5 규획) 기간 동안 172개의 중대 수리 설비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
  - 교통 산업 영역에서는 철도 건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허용하고, 도시 간 철도, 도시 내 철도, 자원 개발성 철도, 지선 철도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지방정부 및 민간자본에 개방할 예정
  - 석유가스 및 광산자원 개발 산업 영역에서는 석유, 일반 천연가스, 석탄층 가스 및 셰일가스를 탐사·개발하며, 광산자원 개발을 미래 투자 중점영역으로 지정, 이 중 석유가스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총 37개이며, 철광석, 동광석, 보크사이트 등 광산자원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총 17개임.
- 2008년 실시한 중국 정부의 ‘4조 위안 경기부양책’ 이 세계 금융위기와 경제성장을 급락에 의한 일종의 ‘극약처방’ 이었다면, 2015년 ‘7대 중대 투자 공정’ 은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임.

- 2015년 ‘7대 중대 투자 공정’은 2008년에 비해 투자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며, 주로 소비 촉진 영역에 편중되어 있음.
- 이하에서는 2008년 ‘4조 위안 경기부양책’과 2015년 ‘7대 중대 투자 공정’의 투자영역과 투자규모를 비교 정리

**그림 1** 2008년 ‘4조위안 경기부양책’의 투자영역 및 규모



**표 1** 2015년 ‘7대 중대 투자 공정’의 투자영역 및 목표

| 투자영역                       | 투자항목                                | 투자규모 및 목표                          |
|----------------------------|-------------------------------------|------------------------------------|
| 정보 및 전력망, 석유가스 등 중대 연결망 사업 | 정보 기초 인프라 시설 건설                     | 도농지역을 포괄하는 무선네트워크망의 확보             |
|                            | 광역 송전, 지역 기간 전력망, 도시 전력망, 농촌 전력망 건설 | 12개의 서전동송(西电东送)의 송전로 확보            |
| 건강양로서비스 산업                 | 건강서비스체계 수립                          | 금년 의료위생기관의 인구 천명당 병상 수 4.97개 달성    |
|                            | 양로서비스체계 수립                          | 금년 노인 천명당 양로병상 수 30개 달성            |
|                            | 체육건강시스템 수립                          | 금년 1인당 체육장 면적 1.5m <sup>2</sup> 달성 |
| 생태환경보호 산업                  | 국토생태환경복원                            | 전체 국토면적의 산림율 21.66% 달성             |

| 투자영역               | 투자항목                    | 투자규모 및 목표  |
|--------------------|-------------------------|--|
|                    | 대기오염관리                  | 금년 6,000만톤의 표준석탄에 대한 에너지 절약                            |
|                    | 청정수 확보                  | -  |
| 친환경에너지 산업          | 서남부 지역의 수력발전기지 건설       | 2015년까지 총 26개의 서남부 수력 발전소 및 풍력발전소 건설                   |
|                    | 수력발전소 건설                |  |
|                    | 연해 원자력발전소 건설            | 연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일괄적 시동                                  |
|                    | 태양광발전소 건설               | 1800KW의 발전량 추가 건설, 30개의 분포식 태양광발전 시범구 운영               |
| 식량 및 수리 시설 산업      | 국가식량안전 보장               | 2015년까지 1,000억 근의 식량저장 시설 건설                           |
|                    | 중대 수리 시설 건설             | 2015년까지 6000억 위안 이상 투자                                 |
| 교통 산업              | 고효율의 철도망 건설             | 중서부 지역에서 관련 프로젝트 45개 추진                                |
|                    |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 건설          | 관련 프로젝트 71개 추진   |
|                    | 항공운송 네트워크 설립            | 항로건설 프로젝트 43개 추진                                       |
|                    | 도시 간 철도망 건설             | 관련 프로젝트 25개 추진   |
| 석유가스 및 광산 자원 개발 산업 | 석유가스 배관망 및 저장설비 건설      | 2020년까지 석유가스 배관망의 총 길이 16만 Km 달성.<br>총 37개의 관련 프로젝트 추진 |
|                    | 광산자원 보호 및 개발            | 총 17개의 관련 프로젝트 추진                                      |
|                    | 석탄·전기·알루미늄(煤电铝)의 효율적 이용 | -  |
|                    | 새로운 광산 개발               | -  |

## □ 6대 소비 공정(6大领域消费工程)

- 2014년 10월 29일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상에서 국민소비를 확대하고 소비수준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내수 소비 육성책을 발표
- 먼저 소비촉진을 위한 3대 조치로 ① 소비 증대를 통한 소비 촉진, ② 사회보장 시스템 개선을 통한 소비 촉진, ③ 소비환경 개선을 통한 소비 촉진을 발표
  - 소득분배 제도 개혁에 대한 구체적 조치와 시행 세칙을 발표하여 농민소

득 증대, 개인소득과 경제의 동방성장 실현, 국유기업의 수익금 상납 비중 증대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방침

- 사회보장시스템 미비로 인해 국민들이 소비보다는 노후 혹은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저금에만 치중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장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제시
- 소비에 대한 각종 위법행위를 근절하여 자연스럽게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건전한 소비 환경 구축에도 노력할 예정

○ 3대 소비 촉진 조치와 함께 정보,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관광·레저, 주택, 교육·문화·체육, 양로·건강·가정 소비 영역 등의 6가지 중점 소비 촉진 분야도 발표

- 정보 소비 영역에서는 모바일 인터넷과 사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 소비를 촉진시키고, 광대역 속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온라인쇼핑 발전 및 농촌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건강의료 및 기업 관리 감독 등의 분야에서 빅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도록 함.
-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소비 영역에서는 에너지 절약성 상품 보급을 확대하며, 신에너지 자동차 활용 및 전기차 충전소 설립을 적극 지원함.
- 관광·레저 소비 영역에서는 근로자 유급휴가제도를 실시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자가용 및 캠핑카 야영지 건설을 적극 추진함.
- 주택 소비 영역에서는 보장형(저가형 서민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주택적립금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주택소비를 활성화시키도록 함.
- 교육·문화·체육 소비 영역에서는 사립학교 납입금 정책 개선과 중외합자 학교 설립을 확대하여 해당 영역에서의 소비를 촉진시키도록 함.
- 양로·건강·가정 소비 영역에서는 산업펀드 조성 등을 통해 양로서비스 발전을 촉진시키며, 민간자본의 양로서비스 투자와 관련해 세수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민영의료기관의 수도 및 전기, 난방요금을 공공기관과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

### □ 3대 전략(3大战略)

- 중국 정부는 2015년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경제)’, ‘징진지(京津冀)협동 발전’,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 개발’을 선정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의 중대 과제 중 하나로 ‘일대일로(一帶一路, 뉴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과잉생산능력과 외환보유고의 적절한 관리, 위안화의 국제화 가속화, 중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의존 탈피와 같은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 일대일로(一帶一路)에서 일대(一帶)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신 실�크로드 경제권(新丝绸之路经济带)’을 의미
    - ※ 서북의 산시(陝西), 간수(甘肅), 칭하이(青海), 닝샤(寧夏), 신장(新疆) 5개 성시와 서남의 충칭(重慶), 쓰촨(四川), 윈난(雲南), 광시(廣西) 성시를 포함
    - ※ 동쪽은 아시아태평양 경제권, 서쪽은 유럽 경제권과 연결됨.

그림 2 육상의 뉴실�크로드경제권



- 일로(一路)는 중국 동남연해지역에서 동남아시아, 인도양, 아프리카까지 이르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21世纪海上丝绸之路)’를 의미

그림 3 해상의 뉴실크로드



- 육상과 해상의 뉴실크로드 건설을 위해 고속철도 외교, 실크로드 기금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BRICS 개발은행 설립의 공동 추진, 원자력 발전소 외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는 천연가스, 여행, 전력설비, 교통·물류, 기초 인프라 건설, 금융 등의 6가지 산업영역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됨.
- 올해부터 베이징(北京)과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일대를 함께 묶어 화북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개발하는 ‘징진지(京津冀)협동 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될 예정
- ‘징진지 일체화(京津冀一体化)’ 라는 개념은 1982년 ‘수도경제권(首都经济圈)’ 이라는 용어로 처음 제시되었으나, 관련 계획이 서류형식으로 머물러 있다가 2014년 2월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제안으로 국가 주요 정책의 일환으로 가시화됨.
  - ‘징진지 협동 발전’ 프로젝트는 수도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의 3대 성급 도시를 아우르는 메가시티 건설을 일컫는 것으로, 베이징과 톈진의



성장 동력을 주변 지역으로 전파하여 낙후된 허베이성의 경제발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 중 하나임.

※ 베이징·톈진·허베이의 세 곳을 합치면 2014년 기준 인구 1억 명, GDP 6조 6,500억 위안에 달함.

**표 2** 징진지 지역별 GDP, 면적, 인구 규모

| 지역      | GDP           | 면적                       | 인구           |
|---------|---------------|--------------------------|--------------|
| 베이징     | 2조 1330.8억 위안 | 1만 6,410Km <sup>2</sup>  | 2,156.6만명    |
| 톈진      | 1조 5722.5억 위안 | 1만 1,946Km <sup>2</sup>  | 1,516.8만명    |
| 허베이     | 2조 9421.2억 위안 | 18만 8,800Km <sup>2</sup> | 7,383.8만명    |
| 징진지 수도권 | 6조 6474.5억 위안 | 21만 7,156Km <sup>2</sup> | 1억 1,052.2만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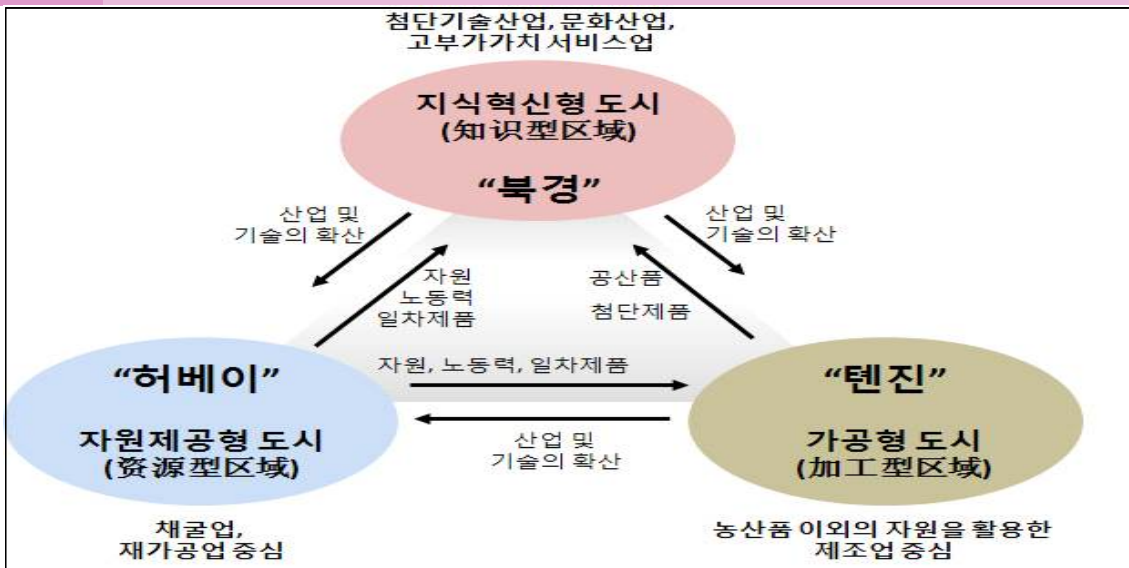
자료: 경화시보

- 중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2030년까지 이 3개 지역을 통합하여 세계 최대의 메가시티로 키울 방침이며, 이를 위해 약 4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
- 이 프로젝트를 통해 베이징은 첨단기술산업, 문화산업,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산업이 집중된 지식혁신형 도시로 육성되는 한편, 톈진은 각종 공산품 첨단기술제품 등을 생산·가공하는 제조업 중심의 가공서비스형 도시로 육성될 예정, 허베이는 채굴업과 재가공업을 통해 각종 자원, 노동력, 일차제품 등을 제공하는 자원제공형 도시로 육성될 계획
- ‘징진지 협동발전’ 프로젝트는 교통, 산업, 환경의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될 전망
  - ※ 교통일체화: 베이징-선양 고속철도, 베이징-장가구 간 도시철도, 베이징-북주-타이베이 고속도로 등의 광역 교통 간선 건설 추진,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 내 단절된 도로의 연결(2,300Km), 교통 서비스 관리의 일체화 추진
  - ※ 환경보호: 장청(张承) 생태 기능 구역 및 수자원 보호림 설립 등에 대한 공동협력
  - ※ 산업이전: 차오페이톈(曹妃甸)을 산업 및 도시 융합 발전 시범구역으로 지정, 보하이(渤海)일대를 중심으로 징진지 경제 협력체계 구축, 3개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연계 발전시키는 산업사슬 강화 방안 제

시, 베이징 신공항 건설을 위한 용지 확보 및 공항 주변 지역의 경제 발전 계획 추진

- 징진지(京津冀)는 2015년 중국의 최대 국책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의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림 4 징진지 3개 지역의 발전전략과 위상



○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 역시 중국 최대 이슈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징진지(京津冀)협동 발전 프로젝트와 더불어 중국 최대의 지역발전 프로젝트가 될 전망

- 1980년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에 대한 전략 구상이 제기되었으며, 2013년 30년간 고심하던 '장강 경제벨트' 구상을 공식화함.

- 이후 2014년 9월 25일 국무원은 '장강경제벨트 발전 지도의견(长江经济带发展指导意见)' 과 '2014-2020년 장강경제벨트 종합 입체 교통회랑 기획(长江经济带综合立体交通走廊)'을 발표

- 장강경제벨트는 장쑤성(江苏省), 저장성(浙江省), 안후이성(安徽省), 장시성(江西省), 후베이성(湖北省), 후난성(湖南省), 쓰촨성(四川省), 윈난성(云

南省), 구이저우성(贵州省), 상하이시(上海市), 충칭시(重庆市) 등 9개의 성(省)과 2개의 직할시를 포함하며, 중국의 서부, 중부, 동부 지역을 연결 시킴.

※ 장강경제벨트에 포함된 성시는 총면적 205만km<sup>2</sup>로, 국토 면적의 약 21.4%를 점유, 국내총생산은 23만 6,000억 위안으로, 전국의 40.9%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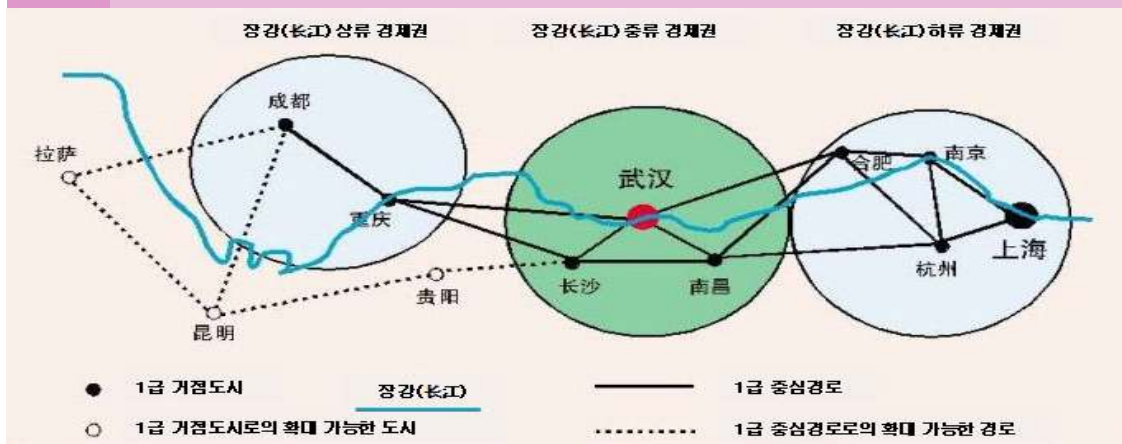
- 장강경제벨트는 단순한 토목형 투자가 아니라 장강 수로 주변의 11개 직할시 및 성을 대상으로 교통 네트워크 확대, 물류 운송 효율화, 산업 재배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임.

※ 장강경제벨트는 크게 장강의 하류의 장강삼각주, 중류의 장강 중류 도시군, 상류의 위룽 도시군(渝蓉城市群: 충칭과 쓰촨성의 청두시를 포함하는 지역) 등 3개의 핵심경제구역을 포함

※ 상해와 충칭, 우한(武汉)을 3대 해운 중심시로 발전시킬 계획

※ 장강 양끝 지점의 관문을 대폭 개방하여 동쪽으로는 상하이, 서쪽으로는 파키스탄과 인도, 미얀마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함.

그림 5 장강 3대 경제권



- 이러한 지역통합개발 사업의 본격화를 통해 기초 인프라건설, 물류, 신형 도시화, 생태환경보호, 첨단기술, 농업 현대화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 될 전망

- 장강경제벨트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는 평행관계를, 연해 경제벨트와는 'T' 형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연안지역과 중서부지역의 상호지원과 시

너지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표 3** 장강 경제벨트 개발 관련 투자 기회

| 투자 영역    | 구체적 투자 내용   |
|----------|---|
| 기초인프라 건설 | 수력발전소, 항구, 도로, 교량, 고속철도, 공항, 홍수방지 토목 공사, 배수 공사 등    |
| 물류       | 물류단지 건설, 물류정보시스템 개발 등                               |
| 신형도시화    | 주택, 의료, 양로, 오수 처리, 도시쓰레기 처리, 사회서비스업 등               |
| 생태환경보호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생태복원, 친환경 농업 등                |
| 첨단기술     | 의료, 교육, 양로 분야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물인터넷, 분자진단 현대생물공학기술 등 |
| 농업현대화    | 친환경농업, 농업기계, 농업기술발전, 농업정보시스템 개발, 농업법률 컨설팅 등         |



#### □ 4월 중국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 여전히 5%대를 배회

○ 2015년 4월 중국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5.9%로 전월대비 0.3% 포인트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 그중 광업은 2.8%, 제조업은 6.5%, 전력·가스·수도는 2.0%를 각각 기록, 전월대비로는 광업과 전력·가스·수도가 각각 1.4% 포인트, 3.1% p 씩 상승하였으나, 제조업은 오히려 0.2% p 하락

- 기업 형태별로는 국유기업이 1.9%로 전월보다 1% p 상승, 사영기업은 7.7%로 전월보다 0.3% p 하락, 집체기업은 0.4%로 전월보다 1% p 하락, 주식제기업은 7.4%로 전월보다 0.6% p 상승, 외자기업은 2.9%로 전월보다 0.4% p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국면을 시현

○ 4월, 지난 달에 이어 대부분 업종이 부진한 국면을 시현

- 소재산업에서는 비철금속이 9.7%로 전월보다 3.3% p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품목들이 부진세를 면치 못함. 지난 달과 유사하게 화학섬유(9.2%)와 플라스틱원료(8.8%)만 공업 평균치를 상회하였고, 플라스틱제품(-0.5%), 선철(-2.1%), 조강(-0.7%)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특히 에틸렌(-7.6%)의 증가율이 급격하게 하락

- 기계설비에서는 소형 트랙터가 -26.1%로 지속적인 폭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속

절삭기계(-1.4%)도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발전설비(-11.3%)는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

- 자동차는 -0.3%, 특히 승용차가 -11.2%의 부진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두 자리 숫자의 고성장세를 나타냈던 조선산업(-1.8%) 역시 1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
- 전자에서는 에어컨(11.3%)과 반도체(9.3%)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부진, 특히 그동안 성장을 견인하였던 핸드폰(-5.0%)이 두 달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고용 상황의 악화와 경기의 전반적 부진으로 소매업 증가율은 9.8%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마침내 한 자리 숫자의 증가율로 전락

- 음식숙박업은 11.7%로 전월대비 0.2%p가 상승하면서 최근 3개월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음.

**표 1** 중국의 주요 업종별 생산 동향 (전년동기비, %)

| 업종별   | 2014년    |      |       | 2015년 |       |       |       |       |
|-------|----------|------|-------|-------|-------|-------|-------|-------|
|       | 1/4분기    | 상반기  | 연간    | 1/4분기 | 1-2월  | 3월    | 4월    |       |
| 공업 전체 | 8.7      | 8.8  | 8.3   | 6.4   | 6.8   | 5.6   | 5.9   |       |
| 섬유    | 섬유사      | 6.3  | 8.7   | 5.6   | 4.1   | 5.9   | 0.2   | 0.3   |
|       | 방직       | 2.7  | 3.0   | -0.5  | 4.1   | 4.6   | 1.4   | 1.4   |
|       | 화학섬유     | 4.8  | 7.5   | 6.4   | 11.9  | 10.6  | 9.9   | 9.2   |
| 화학    | 에틸렌      | 5.3  | 5.3   | 7.6   | 4.5   | 5.7   | 2.5   | -7.6  |
|       | 플라스틱원료   | 9.2  | 11.5  | 10.3  | 11.4  | 12.9  | 7.5   | 8.8   |
|       | 플라스틱제품   | 6.2  | 6.4   | 7.4   | 2.1   | 6.1   | -2.1  | -0.5  |
| 철강    | 선철       | 0.1  | 0.5   | 0.5   | -2.3  | 0     | -2.4  | -2.1  |
|       | 조강       | 2.4  | 3.0   | 0.9   | -1.7  | -1.5  | -1.2  | -0.7  |
|       | 강재       | 5.3  | 6.4   | 4.5   | 2.5   | 2.1   | 3.6   | 3.4   |
| 비철금속  | 6.7      | 5.4  | 7.2   | 7.7   | 6.8   | 6.6   | 9.7   |       |
| 기계    | 금속절삭기계   | 7.8  | 5.0   | 3.0   | -1.6  | 6.1   | -7.0  | -1.4  |
|       | 소형 트랙터   | -6.9 | -11.1 | -13.9 | -16.9 | -11.5 | -20.3 | -26.1 |
|       | 대기오염방지설비 | 6.9  | 14.2  | 11.9  | 13.6  | 21.1  | 4.8   | -4.2  |
|       | 발전설비     | 30.0 | 2.9   | 9.2   | 6.1   | -0.6  | 12.9  | -11.3 |
| 자동차   | 10.8     | 10.9 | 7.1   | 4.7   | 4.6   | 3.5   | -0.3  |       |
| 조선    | -16.2    | 0.2  | 5.5   | 18.9  | 15.4  | 22.6  | -1.8  |       |

|     |                  |      |      |      |       |      |       |       |
|-----|------------------|------|------|------|-------|------|-------|-------|
| 전자  | 세탁기              | -3.5 | -3.6 | -3.3 | 9.7   | 12.2 | 6.6   | 2.8   |
|     | 냉장고              | 1.2  | 0.7  | -1.0 | -3.3  | 1.0  | -9.0  | 0.5   |
|     | 에어컨              | 19.9 | 16.3 | 11.5 | -1.5  | -7.0 | 2.9   | 11.3  |
|     | 컬러TV             | 8.5  | 12.6 | 6.2  | 7.5   | 9.2  | -2.4  | 0.6   |
|     | 컴퓨터              | 2.6  | 7.5  | -3.1 | -12.8 | -9.7 | -17.9 | -10.5 |
|     | 반도체              | 4.2  | 9.2  | 12.9 | 11.9  | 12.3 | 10.8  | 9.3   |
|     | 핸드폰              | 14.7 | 14.0 | 7.5  | -1.5  | 6.1  | -10.4 | -5.0  |
| 서비스 | 화물운수             | 7.4  | 7.5  | 7.1  | 4.5   | 9.2  | -2.5  | 3.0   |
|     | 여객운수             | 1.6  | 2.5  | 3.9  | 1.0   | -3.2 | 9.2   | 1.0   |
|     | 우편 <sup>3)</sup> | 35.1 | 35.1 | 35.6 | 28.8  | 30.5 | 28.8  | -     |
|     | 통신 <sup>3)</sup> | 15.2 | 15.1 | 16.1 | 22.0  | 21.6 | 22.0  | -     |
|     | 소매업              | 12.2 | 12.4 | 12.2 | 10.5  | 10.7 | 10.1  | 9.8   |
|     | 음식숙박업            | 9.8  | 10.1 | 9.7  | 11.3  | 11.2 | 11.5  | 11.7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월보」, 각 월호

- 주 : 1) 공업 전체는 부가가치증가율  
 2) 비교가격 기준으로 계산  
 3) 각월 1월부터 누계 기준

## □ 5월, 관방치와 민간치 모두 상승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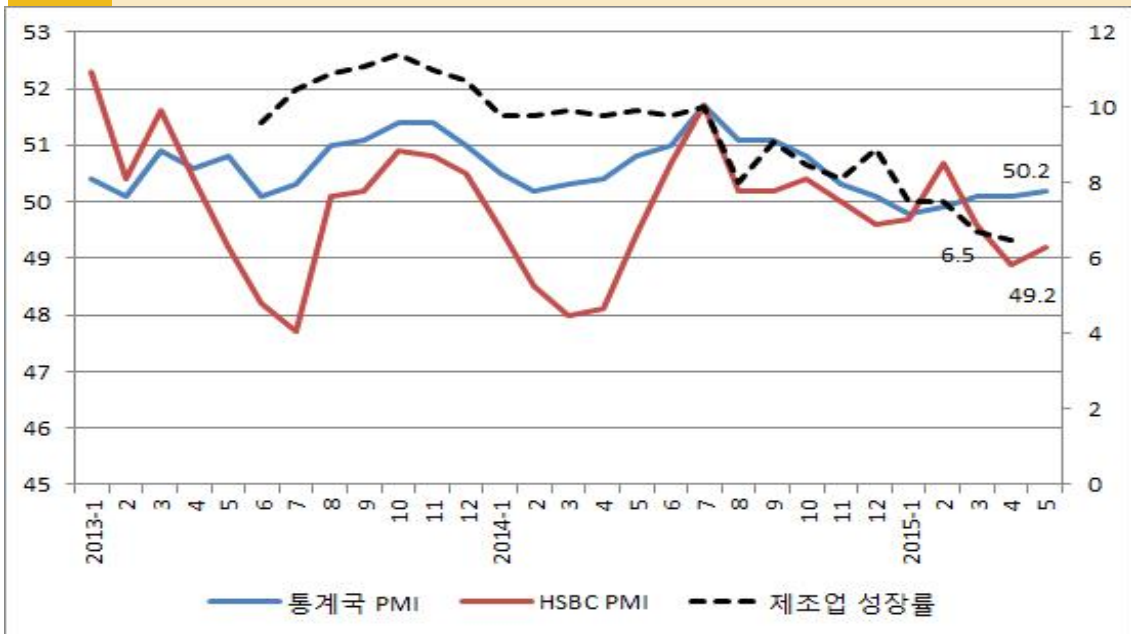
- 실제 제조업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국가통계국의 PMI 관방치와 HSBC의 민간치가 모두 상승세를 보여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안정된 국면을 시현
- 5월 중국 관방 제조업 PMI 지수는 50.2로 전월에 비해 0.1% P 상승, 세달째 확장국면을 시현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50.7로 전월대비 0.1 포인트 상승하였고, 중형기업도 50.4로 금년 처음으로 임계치를 상승한 반면, 소형기업(47.9)은 전월대비 0.5 P 하락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기체감 격차가 확대
  - 생산지수(52.9)는 전월대비 0.3 p 상승하여 생산이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음을 시사하였고, 신규주문지수(50.6)도 전월대비 0.4 p 상승, 원자재재고지수(51.0)도 금년 들어 최고치를 기록
  - 반면, 수출 신규주문지수와 수입지수는 임계치를 하회하면서 대외여건이



여전히 어려움을 나타냄.

- 한편, 5월 HSBC(汇丰) PMI지수는 49.2로 세 달만에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나 여전히 임계치를 하회하고 있는 상태
  - 신규주문지수가 3개월째 하락하고 있으며, 주 요인은 해외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 수출 신규주문지수는 2013년 6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 시장경기가 부진하고 수요가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생산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업원들이 이직해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
  - HSBC 전문가는 5월 PMI 지수를 볼 때 중국 제조업이 한층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신규 수출주문지수의 하락과 고용 악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중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제언

그림 1 중국 관방 및 민간 제조업 PMI지수 변동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www.stats.gov.cn); Markit, HSBC([www.markiteconomics.com](http://www.markiteconomics.com))



## □ 시진핑, 13차 5개년 계획 기간의 발전 방향 제시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월 25일~28일 저장(浙江)성 시찰 중 화동지역 6개성 1개시 정부와 좌담회를 열고, 13차 5개년 발전계획(이하, 13.5계획) 기간의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방향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

- 시진핑 주석의 금번 저장성 시찰은 여러모로 관심을 끌고 있으며, 저장성은 시진핑이 처음으로 성급 공산당위원회 최고지도자를 맡았던 지역으로, 이번 시찰은 주석에 오른 후 처음으로 저장성을 방문한 것임.
- 7월 중앙정치국 회의를 앞두고 저장성 시찰을 떠난 시진핑 주석이 저장성에서 ‘뉴노멀(新常态)’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중앙정치국 회의의 향방을 짐작케 함.

○ 시진핑 주석은 13.5 계획기간 동안 경제성장 유지, 경제성장방식 전환, 산업구조조정, 혁신 주도형 성장, 농업의 현대화, 제도·체제 개혁, 지역통합 발전, 친환경 발전, 민생 개선, 빈곤구제와 재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경제발전은 여전히 13.5 계획 기간의 중요한 화두로, 시진핑 주석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힘.
- 경제성장방식 전환과 관련해 경제의 질적 성장과 효율 증대에 초점을 맞

추고, 3대 성장 주축인 소비, 투자, 수출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강조

○ 산업 방면에서는 제2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통합 발전을 이루고, 자원소모형에서 기술혁신 주도형으로 전환을 추구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소질 향상과 관리 혁신을 통한 전환을 모색할 계획임.

- 시진핑 주석은 산업구조의 개선과 산업 고도화는 중국 경제 종합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향후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에 더욱 힘쓰고, 새로운 업태와 비즈니스모델 창출에 주력할 계획임을 강조

- 이에 대해 국가행정대학 장잔빈(張占斌) 경제학부 주임은 이번 저장성 시찰에서 시진핑 주석이 13.5규획의 큰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혁신(創新)’이 13.5 규획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

○ 2020년 전면적인 소강사회 실현 목표와 관련해 빈곤 퇴치, 농업 현대화와 생태환경 개선이 13.5 규획 기간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름.

- 13.5 규획 기간은 중국의 발전 계획상에서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 진입을 목표로 한 중대한 시기로 현재 소강사회 실현의 최대 난제로 남아 있는 빈곤 문제 해결이 13.5 규획 기간의 중점 업무가 될 것으로 보임.

- 시진핑 주석은 6월 구이저우(貴州)성에서 7개성 지방정부와 좌담회를 열고, 2020년까지 빈곤 가정을 줄이는데 주력할 것을 지시함.

- 또한 2020년 중국이 소강사회를 실현하는데 있어 산업구조 고도화는 관건적인 요소이며, 혁신 주도형 성장은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농업 현대화는 그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농업 현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 시진핑 주석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균형발전을 언급하며, 생태환경 개선이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함.

- 이와 관련, 환경보호부는 최근 135 기간에는 매년 약 2조 위안을 환경보호에 투입하여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생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힘.

□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첫 액션플랜, ‘인터넷+유통’ 계획 발표

-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전략은 ‘스마트 제조(제조강국 2025)’ 와 더불어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와 경제방식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중국의 신(新) 성장동력으로 부상

그림 1 ‘인터넷 플러스’ 전략의 관련 산업



- ‘인터넷 플러스’ 는 2012년 11월, 제5회 모바일 인터넷 박람회에서 중국 IT 시장조사기관 엔포데스크(易观智库, Enfodesk) 위양(于扬) 회장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개념
- 2015년 3월, 전국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제시한 이후, 경제 산업분야의 핵심 화두로 부상하기 시작
- ‘인터넷 플러스’ 란 인터넷 플랫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을 전통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과 융합시켜 새로운 경제발전 체계를 창조하는 전략을 의미

- 이 전략은 모바일 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 빅데이터 · 사물 인터넷을 전통산업과 융합시킴으로써 산업 구조전환과 업그레이드를 도모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중국 인터넷 시장의 지속적 성장세와 거대한 잠재력은 ‘인터넷 플러스’ 전략이 산업 전반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시장적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음.
- 2014년 중국 인터넷 경제 시장규모는 약 8,706억 위안으로 전년 약 5,923억 위안 대비 47%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1조 위안, 2018년에는 2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
  - ※ 2014년 기준 PC 인터넷 시장의 규모는 6,477.3억 위안, 모바일 인터넷 시장 규모는 2,228.9억 위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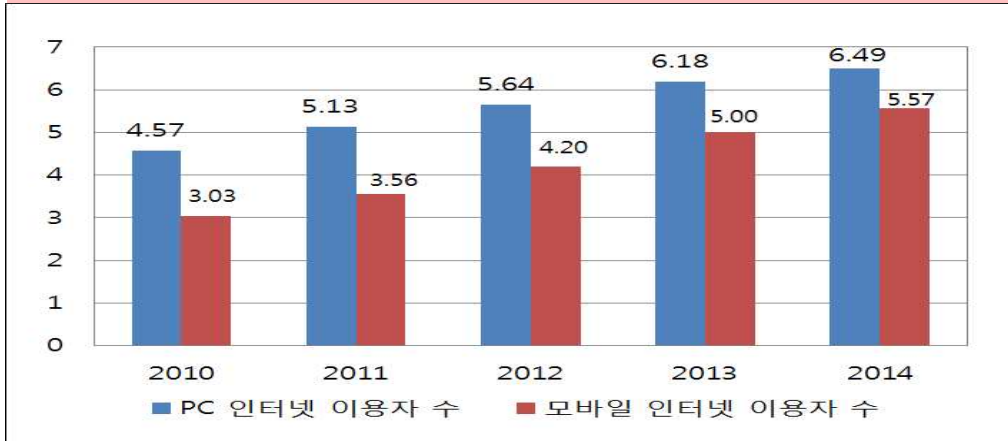
**그림 2** 중국 인터넷 경제 시장규모 (단위: 억 위안)



자료: i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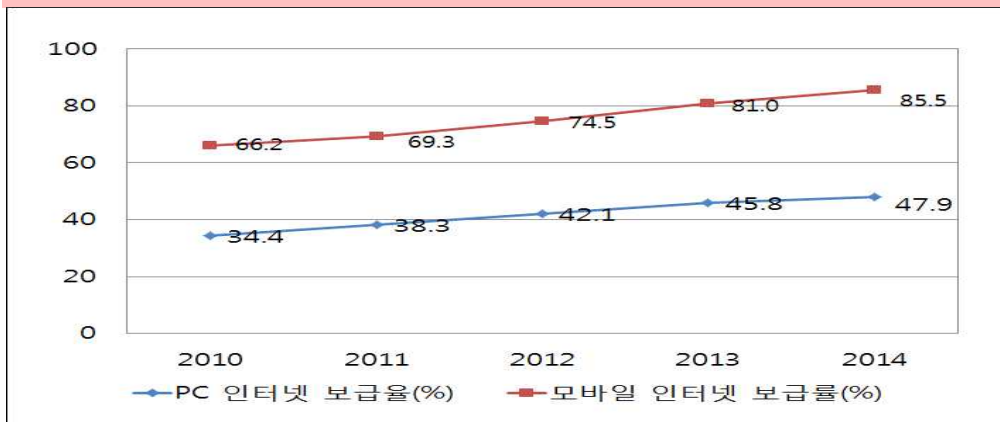
- 2014년 기준 중국 PC 인터넷 이용자 수는 6억 4,900만명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47.9%에 달하며,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수는 5억 5,700만명으로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은 85.8%에 달함.
- 인터넷 이용자 수와 보급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중국 인터넷 경제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음.

**그림 3** 중국 PC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수 (단위: 억 명)



자료: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

**그림 4** 중국 PC 및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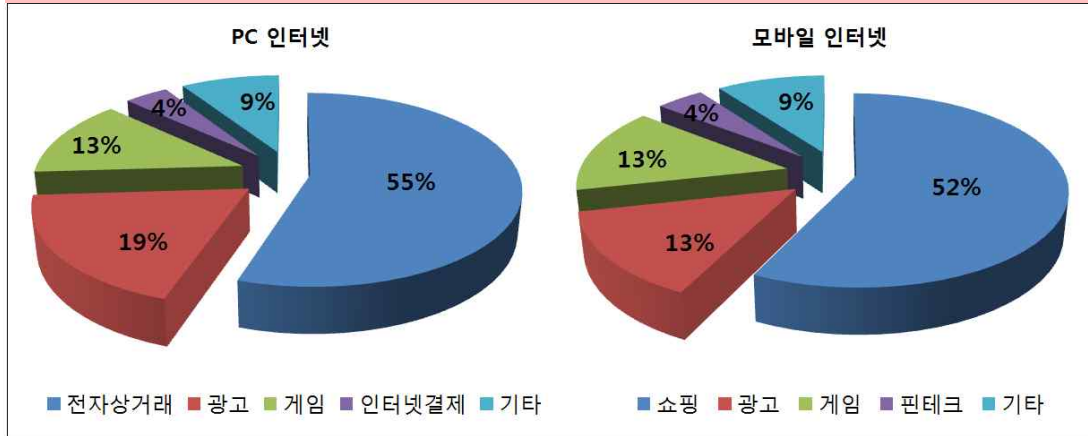


자료: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

- 하지만, 인터넷 경제가 중국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7%에 불과, 이는 인터넷 경제가 아직은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중국의 인터넷 경제중 전자상거래 시장이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정부가 ‘인터넷 플러스’ 전략의 첫 액션플랜으로 <“인터넷+유통” 액션플랜(‘互联网+流通’ 行动计划)>을 발표하게 된 주된 배경으로 작용
- 2014년 PC 인터넷 시장과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서 온라인 쇼핑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모두 50% 이상을 차지, 이는 전자상거래가 중국

인터넷 시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

그림 5 중국 PC 및 모바일 인터넷 경제 분야별 비중 (단위: %)



자료: i Research

- 2014년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거래규모는 전년 대비 31.4% 증가한 13조 4천억 위안에 육박
  - 이 중, B2B 시장 거래규모는 10조 위안(증가율 21.9%)이며, 온라인 소매 시장의 거래규모는 2조 8천억 위안(증가율 49.7%)을 기록

그림 6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거래 규모 (단위: 조 위안)



자료: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

- 2015년 5월 15일 중국 상무부는 ‘인터넷+유통’ 액션플랜을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 육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
  - 첫째, 1~2년 내 200개의 농촌 전자상거래 종합 시범 현(縣)을 건설하여 해당 시범 현의 기존 대비 연평균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 증가율이 30%



이상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

- 둘째, 60개의 국가급 전자상거래 시범기지를 건설하고 150개의 국가급 전자상거래 시범기업과 100개의 웹 서비스 브랜드를 양성하도록 함.
- 셋째, 시장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100개의 전자상거래 해외물류기지를 구축하도록 함.
- 넷째, 50개 지역을 중점으로 전자상거래 인재육성기지를 설립하도록 함.
- 다섯째, 2016년 말까지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액 22조 위안, 온라인 소매 판매액 5조 5,000억 위안을 달성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농촌과 중소도시의 전자상거래와 해외 전자상거래를 집중 발전시키고, ‘온라인 투 오프라인(Online to Offline)’ 융합을 강화하겠다는 계획

○ ‘인터넷+유통’ 액션플랜은 <전자상거래 발전을 통한 신 경제성장동력 육성에 관한 의견(关于大力发展电子商务加快培育经济新动力的意见)>에 의거, 인터넷과 유통업의 성공적 융합을 위한 6대 미션을 제시

- 첫째,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농촌지역까지 확대하여, 공업품과 일반 소비품들의 농촌지역으로의 유통과 각종 농산품들의 농촌 외 지역으로의 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유통 경로를 마련
- 둘째, 지역사회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온라인 소비를 위한 서비스 인프라 건설
- 셋째, 중소도시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3·4선 도시의 소비 편리성을 제고
- 넷째, ‘온라인 투 오프라인(Online to Offline)’ 융합을 통한 소비 잠재력을 발굴

- 다섯째, 국제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여 국내의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해외까지 확대시킴.

- 여섯째, 전자상거래를 위한 다양한 해외경로를 개발하여 전자상거래 업체의 해외 진출 추진

○ 이상의 목표와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는 4개 영역에서 11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

- 4개 영역은 인프라 건설 및 환경 구축, 기업 창의력 육성, 홍보 및 인력 육성, 관련 법률·법규 제정으로 구성

- 각 영역별 구체적 실행방안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 ‘인터넷+유통’ 액션플랜의 4대 영역 및 11개 실행방안**

| 영역             | 실행방안  |
|----------------|---|
| 인프라 건설 및 환경 구축 | ① 정부 차원에서의 “인터넷+유통” 발전 가속화 방안에 대한 지속 연구<br>② 웹서비스 분야 발전을 통한 유통 인프라 환경 개선<br>③ 택배물류와 전자상거래의 공동 발전 추진<br>④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및 통계 시스템,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br>⑤ 지적재산권 침해 및 모조품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 기업 창의력 육성      | ⑥ 전자상거래 시범기지 건설을 통한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촉진<br>⑦ 기존 유통서비스 기업의 혁신적 전자상거래 응용 촉진<br>- 전통적 유통 기업을 위한 다양한 판매경로를 마련해주고, 서비스 분야의 전자상거래의 응용력을 제고하며, O2O 융합을 지원  |
| 홍보 및 인력육성      | ⑧ 지역 간의 교류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용성과의 확산을 촉진<br>⑨ 인재육성시범기지 건설 및 교육훈련 시스템 설립을 통한 전자상거래 전문 인력 육성   |
| 관련 법률·법규 제정    | ⑩ <전자상거래법>의 입법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온라인 비즈니스 데이터 보호 규정>, <국제전자상거래 서비스 규범>, <전자상거래 신용정보 공유에 관한 규정> 등 전자상거래 규범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선 가속화<br>⑪ 전자상거래 국제규정의 제정에 적극 참여 및 주도적 역할 수행<br>- APEC, 한-중, 한·중·일, BRICs 등 국제조직과의 협력 확대 |

자료: 중국 상무부, < ‘인터넷+유통’ 액션플랜( ‘互联网+流通’ 行动计划)> 발표내용 정리

## □ 중국, 초고속 광대역 네트워크 발전 가속화

○ 인터넷 서비스를 둘러싸고 느린 인터넷 속도와 높은 비용에 대한 중국 내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 중국은 현재 인터넷 접속 인구가 6억 4,900만명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47.9%에 달하며,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수는 5억 5,700만명으로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은 85.8%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평균 속도는 전 세계 평균치인 4.5Mbps에도 못 미치지는 3.4Mbps로 세계 82위권 수준에 불과

※ 세계 1위인 한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 25.3Mbps의 약 8분의 1 수준에 불과

※ 세계 2위인 홍콩의 평균 인터넷 속도 16.3Mbps의 약 5분의 1 수준에 불과

- 중국 도시 가구의 연 평균소득은 27,000위안 수준인데 반해 연평균 유·무선 통신비는 3,000위안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

○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불만 해소를 위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관련 부처에게 인터넷 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

- 2015년 4월 14일 리커창 총리는 경제정세와 운영에 관한 좌담회에서 인터넷 속도와 요금의 불합리성에 대해 관련 부처 및 기업을 강력하게 비판

- 이와 관련하여 중국 국무원은 2015년 5월 13일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상무회의에서 도시의 광대역 인터넷 속도를 현재보다 40% 이상 제고하고 비용을 낮추는 조치를 공식적으로 채택

○ 5월 13일 상무회의 결정의 후속조치로서, 5월 20일 국무원은 <인터넷 속

도 향상과 요금 인하 추진 지도의견(关于加快高速宽带网络建设推进网络提速降费指导意见)에 따라 ‘지도의견’을 발표, 이를 통해 인터넷 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

- ‘지도의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4,300억 위안 이상, 내년부터 2017년까지 약 7,000억 위안을 투자하여, 3년간 네트워크 광대역 통신망 정비와 4세대(4G) 이동통신 보급에 총 1조 1,300억 위안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
  - 이를 통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충칭(重慶) 등 4대 직할시나 각 성의 성도 등 주요 도시의 평균 인터넷 속도를 2015년 말까지 초당 20Mbps, 2017년 말까지 초당 30Mbps 수준으로 향상시켜 국제 평균 수준에 이르게 하겠다는 계획
  - 기타 도시 지역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2015년 말까지 초당 10Mbps, 2017년 말까지 초당 20Mbps 수준으로 향상시킬 예정
  - 연내 대도시 가정의 80%에 100Mbps 속도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2017년 말까지 모든 지역에서 100Mbps 속도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
  - 4세대(4G) 모바일 이용자가 3억명에 달할 것에 대비해 올해 안에 130만 개의 4G 기지국을 설치할 예정이며, 2017년 말까지 농촌 지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4G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
- 인터넷 서비스 개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과 더불어, 중국의 3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中国移动通信), 차이나유니콤(中国联通), 차이나텔레콤(中国电信)은 인터넷 비용을 낮추고, 속도는 높이는 일련의 대책을 발표
- 차이나모바일(移动通信)의 경우, 4G 통신망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2015년 말까지 데이터 사용료를 전년대비 35%까지 인하시킬 예정
    - ※ 2015년 말까지 100만개 이상의 4G 기지국을 확보하여 도시, 현(县),

- 향진(乡镇) 등의 지역에 계속해서 4G 통신망을 보급할 예정
  - ※ 모든 3A급 이상의 관광지역 및 고속 철도 내에서 4G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
  - ※ 이러한 조치를 통해 4G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을 85% 수준까지 향상시키고, 4G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업무 수요의 95%를 만족시킬 예정
  - ※ 통신 요금 인하 조치의 일환으로, 50위안에 2G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
- 차이나유니콤(聯通)의 경우, 네트워크망 개선을 통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평균 인터넷 속도를 향상시키고, 2015년 말까지 데이터 사용료를 전년대비 20%까지 인하시킬 예정
    - ※ 북방 10개 성의 평균 인터넷 속도를 초당 20Mbps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농촌지역의 평균 인터넷 속도를 초당 4Mbps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
    - ※ 10위안에 데이터 1.5G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며,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고객들을 위해 매달 6G의 데이터를 18위안에 쓸 수 있는 요금제를 실시할 예정
    - ※ 그 밖에, 100M속도의 인터넷 연간 요금을 기존 3,280위안에서 1,980위안으로 인하할 계획
  -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 역시, 네트워크망 개선을 통해 평균 인터넷 속도를 향상시키고, 2015년 말까지 데이터 사용료를 전년대비 35%까지 인하시킬 예정
    - ※ 2015년 말까지 유선 인터넷 평균 속도를 현재 11Mbps에서 20Mbps로 향상시킬 계획
    - ※ 100M 속도의 인터넷 연간 요금을 3,000위안에서 2,000위안 이하로 인하할 예정
    - ※ 49위안에 2G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

## □ 베이징시 서비스산업 개방 확대

- 5월 21일, 국무원(國務院)이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시험의 총체적 방안(關於北京市服務業擴大開放綜合試點總體方案)>을 통과함에 따라,

현재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산업 개방조치가 베이징으로 확대됨.

- 개방 확대조치의 시행 기간은 국무원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베이징시의 시범 시행을 통해 베이징의 서비스업 개방 수준을 국제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 가능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주요 목적임.
  - 현재 상하이, 광저우, 푸젠, 텐진 4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서비스업 개방 조치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 서비스업 개방 확대를 시행하는 것은 베이징이 최초임.
- 베이징시는 과학기술서비스, 인터넷·정보서비스, 문화·교육서비스, 금융서비스, 비즈니스·관광서비스, 헬스·의료서비스의 6개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개방을 확대함.
- **(과학기술서비스업)**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전자상거래, 물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등 관련 산업 육성하고, 인터넷 금융 혁신센터를 건설할 계획임.
- 기술서비스 분야의 외국기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투자 엔지니어링 설계(지질탐사 제외)기업에 대해 최초 자격 신청시 관련 실적 제출 요구 규정이 폐지되었고, 항공기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측 지배 규정이 취소
- **(인터넷·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반도체 설계 분야에 외국기업 진입 장려, 해외 전자상거래 운영방식과 관리 정책 개선, 베이징에 글로벌기업 R&D센터와 역외서비스센터, 경영본부 유치
- 인재 유치, 기술 도입, 공동 개발 등을 통해 중외기업 간 합자, 합작을 전개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정보기술지원관리, 재무결산 등 국제 서비스 아웃소싱 업무 지원
- **(문화·교육서비스)** 특정지역에 한해 외국기업은 100% 독자로 공연 에이전

시 설립이 가능하나, 서비스 범위는 베이징 내로 제한됨.

- 교육 방면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자녀 국제학교 설립을 장려하고, 외국기업이 합작 방식으로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
- **(금융서비스)** 민간자본과 외국기업의 금융서비스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계 은행 설립을 더욱 간소화함.
  - 보험업을 발전시키고 외국기업의 전문 헬스·의료회사 설립을 지원
- **(비즈니스·관광서비스)** 상품 유통물류, 회계감사, 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외국기업 진입 제한을 철폐하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창업투자, 지식재산권 서비스 등 비즈니스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
  - 외국기업은 지분 인수, 합병 등 방식으로 중국 비즈니스서비스기업의 구조재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관촌(中關村)에 중외 합자 헤드헌터회사를 설립할 경우, 외국측 지분 비율을 70%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최저 등록 자본 기준도 30만 달러에서 12만 5,000달러로 인하
  - 관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방 수준을 확대하여, 상업성 관광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 여행상품과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가 허용됨. 베이징에 설립된 중외 합자여행사는 대만지역 이외의 해외여행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 **(헬스·의료서비스)** 외국기업의 비영리성 의료기구 설립과 기본 의료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외국기업의 합자, 합작 방식의 병원 설립 규정을 점진적으로 완화기로 함.
  - 양로서비스 분야의 외국기업 진입 규제를 낮추고, 재활, 노인간호, 방문간호 등 노인 돌봄 서비스와 산후조리서비스, 심리재활서비스 등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집중 유치
- 베이징시는 특히 ‘중국의 실리콘벨리’라 불리는 중관촌에 대해 특별 개



방조치를 취해 개방 수준을 한층 제고

- 중관춘에 과학기술, 교육, 경제 분야의 해외 비정부기구(NGO) 대표기구 설립을 유치하고, 외국 단체와 개인이 기술, 경제 관련 비사업체를 받기 및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외 사회조직이 공동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 중관춘내 기술형 기업의 해외투자 관리제도 혁신방안을 강구하고, 기업의 외환 결제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
- 2014년 베이징의 제3차 산업 규모는 전년도 대비 77.9% 증가한 1조 6,626억 3천만 위안을 기록했으며, 특히 생산성 서비스업의 발전이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올해 1분기, 베이징의 생산성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2,777억 5천만 위안에 달했으며, 그 중 금융, 정보, 기술서비스업이 베이징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기여도가 70% 이상임.



## 중국의 식품안전 정책 동향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장 전형진

### □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혁 배경

- 중국정부는 「식품안전법」(2009년)을 기본법으로 하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농식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식품안전 사고가 국내외적으로 빈발하는 원인을 제도적 결함에서 찾고 「식품위생법」을 대체하는 「식품안전법」을 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
  - 이러한 조치는 세계적으로 식품안전 정책 기조가 위생으로부터 안전으로 전환중인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식품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 문제는 쉽게 근절되지 않았고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도 여전히 팽배
  - 위생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식품이나 유해 식품을 생산·판매한 사건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결 건수가 2009년 148건, 2010년 119건, 2011년 333건, 2012년 1,08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멜라닌 분유’, ‘하수구 식용유’, ‘염색 만두’, ‘포름알데히드 가짜 술’, ‘독 분유’, ‘불법첨가제 고기’, ‘독 콩나물’, ‘쓰레

기 고기'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식품안전사고가 빈발

- 중국은 새로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지 불과 4년 만에 재차 개혁을 추진
  - 중국 정부는 “혀끝의 안전을 확보한다(确保舌尖上的安全)”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시 한 번 식품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
  - 그동안 식품안전사고가 줄지 않는 원인을 식품안전관리체계상의 결함에 서 찾고 조직 및 법률 체계 개편을 추진

#### □ 식품안전 관리 조직체계 개편

- 중국은 2009년 「식품안전법」 제정을 계기로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 중앙정부 →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에 이르는 3단계의 식품안전 관리감독 조직체계 확립
-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설립(「식품안전법」 제4조 규정에 의해 2010년 2월 신설)
  - 식품안전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하고, 정부의 식품안전 업무를 배분하고 통합 지도하며, 식품안전 관리감독에 관한 중요 정책을 제시하고 책임을 지는 중국의 식품안전 업무관련 최상위 심의·조정 기구<sup>10)</sup>
-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을 신설하고 식품안전 관리감독 조직체계 개혁
  - CFDA는 기존의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관공실 업무와 국가식품약품감독 관리국 업무 그리고 식품의 생산·가공·유통단계의 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통합하여 설립한 조직<sup>11)</sup>으로서 식품의 생산·가공, 유통 및 소비 단계를

10) 위원장은 리커창(李克强) 총리, 부위원장은 후이량위(回良玉) 부총리와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위원은 농업부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

11)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식품(식품 첨가제·보건식품 포함, 이하 동일)안전, 약품(한약·민족약품 포함, 이하 동일), 의료기기, 화장품의 관리감독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 초

## 통일적으로 관리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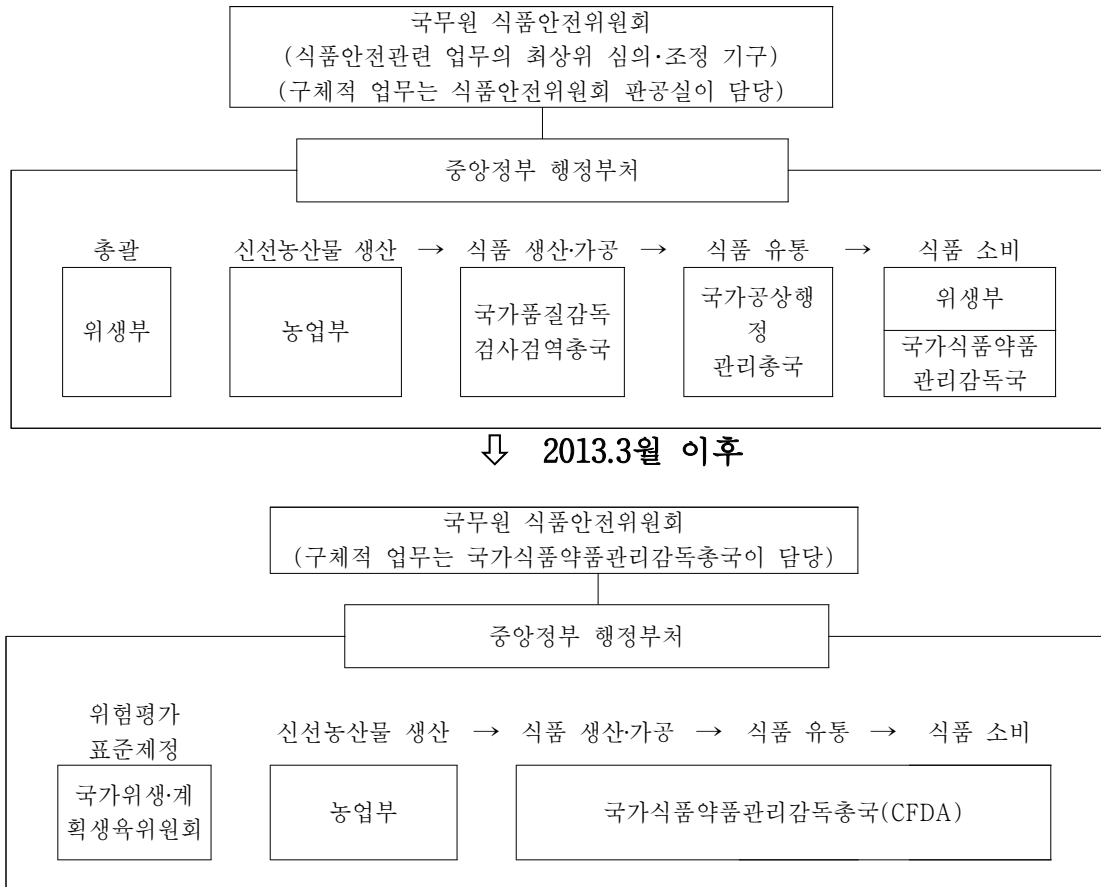
-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기존의 위생부와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를 통합하여 설립한 조직으로서 식품안전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식품안전 관련 표준 제정
  - 식품관련 제품(포장재료, 용기, 세척제, 소독제 등)의 생산과 식품 수출입에 대해서는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관리감독
  - 보건식품 광고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감독 및 조사 업무 담당
- CFDA의 설립은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다원화체계에서 일원화체계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
- 식품의 생산·가공단계, 유통단계 그리고 소비단계별로 관리감독 기관이 달라 식품안전 관리감독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식품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설립
  - 이는 식품의 생산·가공, 유통 및 소비 단계를 통일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권한을 집중시켜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구상
-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에서는 식품약품관리감독 담당 부처와 위생, 농업,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담당 부처가 식품안전 관련 업무 분담
- 상급 인민정부(예를 들어 시, 성, 중앙정부)에 설치된 식품안전 관리감독

---

안 작성, ②식품행정허가 실시방법 제정 및 감독 실시, ③국가약전(藥典) 등 약품·의료기기의 표준과 분류관리제도 제정 및 공포와 감독 실시, ④식품·약품·의료기기·화장품 관리감독의 검사제도 제정 및 검사실시, 중·대 위법 행위 조사 및 처리, ⑤식품·약품 안전 사고 응급대응체계 구축, ⑥식품·약품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 발전규획 제정, 식품약품 검사모니터링체계 및 전자이력추적체계와 정보화체계 구축, ⑦식품·약품 안전 관련 홍보, 교육 훈련, 국제교류 및 협력 전개, ⑧지방정부의 식품·약품 관리감독 업무 지도, ⑨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의 일상 업무 담당, ⑩국무원 및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의 지시 업무 처리 등

기관이 하급 인민정부에 설치하여 수직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도 해당 인민정부와 협조하여 식품안전 관리감독 업무 수행

그림 1 중국 중앙정부의 식품안전 관리감독 조직체계 변화



- 식품과 구별되는 식용농산물(재배업, 사육업 및 양식업 생산물)의 품질안전 관리감독은 농업부가 담당<sup>12)</sup>
  - 다만 식용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부터 도소매단계(또는 가공단계)에 진입하기 이전 단계까지만 관리감독. 식용농산물의 가공 또는 유통, 소비 단계의 품질안전 관리감독은 CFDA가 담당
  - 농업부는 가축·가금의 도축단계와 신선 원유 수매단계의 품질안전 관리감독 업무 그리고 수의약품, 사료, 사료첨가제 그리고 농약, 비료 등 농업투입재의 품질과 사용 관리감독 업무도 담당

12) 중국은 식품과는 구별되는 식용농산물의 경우 2006년에 제정한 「농산물품질안전법」(2006.11.1 시행)에 근거하여 품질안전 관리감독 실시

## □ 「식품안전법」 개정

○ 중국은 2009년 제정된 「식품안전법」의 개정을 추진한 끝에 지난 4월 24일 신 「식품안전법」(총 10장 154조)을 공포하고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

- 2013년 10월 수정초안이 공개된 후 각계각층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2차례 수정 과정을 거쳐 이번에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
- 현행 법률과 비교하여 목차 구성에는 변화가 없으나 법률 조항이 50개 증가. 특히 식품의 생산·가공·판매 및 음식서비스(제4장; 21개 조항 증가)와 법률책임(제9장; 13개 증가)에 관한 규정이 대폭 수정되거나 신설

○ 현행 법률과 비교한 신 「식품안전법」의 주요 특징

-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내용 반영
- 식품의 생산·가공·판매 및 음식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의 책임 규정 강화
- 식품안전 관리감독체계를 혁신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표 1 신 「식품안전법」의 주요 신설 및 수정 사항

| 구분                                     | 주요 신설 및 수정 사항   |
|--|---|
| 제1장<br>총칙<br>(1조~13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의 적용 범위 확대(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li> <li>- 식품안전 업무 수행 원칙, 식품 생산·가공·판매 기업 및 음식서비스 기업의 책임 원칙, 지방정부의 식품안전관리감독 책임 원칙 및 농약사용 관리제도 실시 원칙 제시</li> <li>- 식품협회와 소비자협회의 적극적 역할 명시</li> <li>- 식품안전 업무 모범 수행 조직·개인에 대한 표창·장려제도 실시</li> </ul> |
| 제2장<br>식품안전위험<br>모니터링과 평가<br>(14조~23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업무 수행 관련 규정 구체화(15조)</li> <li>- 식품안전위험 평가 대상에 식품 관련 제품 추가(17조)</li> <li>- 식품안전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18조)</li> <li>- 현급(縣級) 이상 정부의 식품안전 관리감독 부처와 식품안전위험 평가 부처의 식품안전 위험교류 사업 전개 규정(23조)</li> </ul>                 |

|                                    |   |
|------------------------------------|---|
| 제3장<br>식품안전표준<br>(24조~32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표준 포함 내용에 생물독소의 함유량 제한 추가(26조)</li> <li>- 가축·가금의 도축 및 검사 관련 규정 제정 주체(국무원 농업행정 담당 부처) 명시(27조)</li> <li>- 성급(省级) 이상 정부의 위생행정 담당 부처의 식품안전 국가표준, 지방표준 및 기업표준 관련 정보 제공 의무(31조)</li> <li>- 성급(省级) 이상 정부의 위생행정 담당 부처의 식품안전 국가표준, 지방표준 및 기업표준 집행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정 의무(32조)</li> </ul> |
| 제4장<br>식품생산경영<br>(33조~83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규정(1절), 생산경영과정 통제(2절), 라벨·설명서 및 광고(3절), 특수식품(4절) 등 4개 절로 세분하여 규정</li> <li>- 식품안전의 제1차적 책임자인 식품 생산·가공·판매 및 음식서비스 기업의 책임 사항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li> </ul>  |
| 제5장<br>식품검사<br>(84조~90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생산·가공·판매 및 음식서비스 기업의 식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88조)</li> </ul>   |
| 제7장<br>식품안전사고<br>처리<br>(102조~108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식품안전사고 대비 응급 매뉴얼 포함 사항 규정(102조)</li> <li>- 식원성질병 또는 의사 환자 내원 시 의료기관의 조치 사항(104조)</li> <li>- 식품안전사고 조사 담당 부처의 권한(108조)</li> </ul>   |
| 제8장<br>관리감독<br>(109조~121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관리감독 담당 부처의 연간 식품안전관리감독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중점관리 사항(109조)</li> <li>- 식품 생산·가공·판매 및 음식서비스 기업이나 지방정부의 식품안전 관련 피해 은폐 및 미조치 시 책임 사항(114조, 117조)</li> <li>- 식품안전 관련 식품과파라치제도 실시 규정(115조)</li> <li>- 허위의 식품안전 관련 정보 유포 시 처리 방법(120조)</li> </ul>  |
| 제9장<br>법률책임<br>(122조~149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법행위의 결과에 대한 처벌에서 위법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로 전환</li> <li>- 법률 위반 상황을 세분하여 제시하고 위법행위 시 처벌 대폭 강화</li> </ul>   |

## □ 신 「식품안전법」의 수입식품 관리 규정

○ 신 「식품안전법」 제6장(식품수출입)은 수출입 식품의 안전 관리감독 관련 사항을 규정

- 현행 법률에 비해 3개 조항이 신설되었고, 기존 조항들도 대부분 조금씩 수정

○ (신설) 수입 식품의 안전 관리감독 주체 명시(91조)

- 수입 식품의 안전 관리감독 주체가 국가출입국검사검역 담당 부처임을 명시하여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



○ (신설) 국외 식품수출업체와 식품생산기업 그리고 국내 식품수입업체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특히 식품수입업체의 책임 강조(94조)

- 국외 식품수출업체와 식품생산기업은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 제품<sup>13)</sup>을 중국에 수출할 때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준수하고, 라벨과 설명서의 내용에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
- 국내 식품수입업체는 국외 식품수출업체와 식품생산기업에 대한 심사제도를 확립하고 심사에 불합격한 식품은 수입을 불허한다고 규정
- 국내 식품수입업체는 수입 식품이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이나 신체건강을 위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식품의 수입을 중지하고 리콜을 실시해야한다고 규정

○ (신설) 수입 식품 안전 관리감독 주체인 국가출입국검사검역 담당 부처의 식품수입 대상국에 대한 검사검역 관련 권리사항 명시(101조)

- 국가출입국검사검역 담당 부처는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 상황에 대해 평가·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응하는 검사검역 기준을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

**표 2** 신 「식품안전법」의 수입 식품 안전 관리감독 관련 주요 수정 사항

| 구분                               | 주요 수정 사항  |
|----------------------------------|---|
| 식품 수입시 법령 준수사항(92조)              | - 수입 식품(식품첨가제)는 국가출입국검사검역 담당 부처의 요구에 따라 검사 합격증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 추가   |
|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부재한 식품의 수입시 요구사항(93조) | -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 수입시 식품수입업체, 국외 식품수출업체 및 식품생산기업이 국무원 위생행정 담당 부처에 관련 표준을 적용하는 국가의 표준 또는 국제표준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추가<br>· 담당 부처는 관련 표준이 식품안전 요구에 부합하면 일시적 사용을 결정하고 상응하는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제정하도록 규정<br>- 새로운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식품(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 수입시 국무원 위생행정 담당 부처에 안전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부처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 추가<br>· 심사 결과 식품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허가하고 이를 공표하며,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이유와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 |

13) 식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용기, 세척제, 소독제와 식품 생산·가공·판매 및 음식서비스에 사용되는 공구, 설비(2조)

|                               |  |
|-------------------------------|--|
| 수입식품의 식품안전문제 발생 시 조치 사항(95조)  | - 식품안전문제의 처리에 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식품약품관리감독 담당 부처가 수입 식품(식품첨가제)에 대한 관리감독 과정에 중대한 식품안전문제 발견 시 국무원 식품약품관리감독 담당 부처가 국가출입국검사검역 담당부처에 통보하고 이 부처는 즉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내용 추가  |
| 수입 주체의 등록제도 관련 사항(96조)        | - 국외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 외에 국내 식품수입업체도 국가출입국검사검역 담당 부처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추가<br>- 국외 식품생산기업이 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신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기업의 등록을 취소하고 공개한다는 내용 추가  |
| 표기사항(96조)                     | - 수입 포장 식품 외에 식품첨가제도 중국어 라벨과 설명서를 구비해야 한다는 내용 추가   |
| 수입업체의 수입 및 판매 기록제도 운영 사항(98조) | - 수입업체의 수입 및 판매 관련 기록 사항에 주소를 추가하고 관련 증명서류는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 추가<br>- 기록 및 증명서류 보존기한을 유통기한 만료 후 6개월 이상, 명확한 유통기한이 없는 경우 2년 이상으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   |
|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준수 사항(99조)         | - 수출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수출식품이 수입국의 식품표준 또는 계약서 상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한다는 내용 추가<br>- 수출식품 생산기업과 수출식품 원료 재배(사육)장은 국가출입국검사검역 담당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 추가   |
| 수입식품 안전 관리감독 주체의 의무 사항(100조)  | - 수입 식품의 관리감독 주체인 국가출입국검사검역 담당 부처가 관련 정부 부처, 기관 및 기업에 통보할 수출입 식품의 안전 관련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br>· 수출입 식품 검사검역 과정에서 발견한 식품안전 관련 정보<br>· 식품협회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입 식품 안전 관련 정보<br>· 국제기구나 국외 정부기구가 발표한 식품안전 관련 정보, 위험조기 정보 관련 정보, 국외 식품협회 등의 조직이나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식품안전 관련 정보<br>· 기타 식품안전 관련 정보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br>- 국가출입국검사검역 담당 부처가 불량기록이 있는 수입업체, 국내 식품수출업체 및 국내 수출식품생산기업에 대해서 해당 수출입 식품의 검사검역을 강화하도록 규정 |

## □ 시사점

○ 중국이 2013년 3월 생산, 가공, 유통 단계의 식품안전을 통일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정부 부처(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개편한데 이어 최근 「식품안전법」의 개정을 완료함에 따라 명실공히 중국의 새로운 식품안전관리체계가 완성

- 중국은 식품안전 관련 조직체계 개편과 법률 개정을 계기로 중국산 식품의 안전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국가이미지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신 「식품안전법」은 식품 생산·가공·판매 및 음식서비스 기업의 책임 사항을 세분하여 규정한테 기초하여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현급(縣級) 이상 정부의 식품안전관리감독 주체를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불이행에 따른 처벌 규정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률 적용 시 중국산 식품의 품질안전 수준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중국은 식품안전 관련 조직 및 법률 체계 개혁을 계기로 향후 국내 식품 안전사고의 근절을 위해서 식품안전 관련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신 「식품안전법」에 수입 식품(식품첨가제)의 관리감독 주체, 식품수입 대상국에 대한 검사검역 관련 권리사항 그리고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이나 새로운 원료를 사용한 식품 수입 시 절차 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감독과 SPS 조치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
-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대 중국 농식품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국내 농업인이나 농식품기업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
  - 중국시장에 우리 농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변화가 심한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
  - 특히 정부 차원에서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는 SPS 조치 등에 관한 최신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농식품수출경영체에게 제공하고 해당 경영체는 이를 숙지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노력이 필요<sup>14)</sup>

14) 중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한국산 흰우유(살균유)를 수출하던 국내 업체가 중국의 관련 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출업체 등록이 유보되고 결과적으로 수출이 잠정적으로 중지되었던 사례